

언론도... 정치권도... 歴史 앞에 罪 지었다

문창극 총리후보 사퇴파문

“논평은 자유로워야 한다, 진실은 신성한 것이다.”

언론인에게, 저널리스트를 위해 역사에 남을 경구를 말한 사람은 당파신문이 판을 치는 영국에서 가디언이라는 중립신문을 50년 넘게 만든 스캇(PC. Scott)이라는 저널리스트였다.

오늘까지도 이 경구가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것은 저널리스트가 사실 뒤에 가려진 진실을 보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진실은 문자 그대로 참된 사실, 포괄적인 진실이라야 한다. 객관보도라는 명분으로 사실의 한 부분만을 보도하거나 저널리스트 고의로 보태고 빼는 것은 신성해야 할 사실보도라고 할 수 없다.

짧지 않은 헌정사를 통해서 총리후보로 지명됐다가 헌법이 정한 청문회를 거치지 못하고 사퇴한 문창극 사태는 바로 스캇이 말한 신성한 사실의 보도와는 거리가 먼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 때문이다. 이 사태의 또다른, 더 중요한 측면은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하나같이 헌법을 짓밟았다는 비난에서 비켜설 수 없다는 엄중한 사실이다.

사실보도라고 강변하면서 사실의 한 단면만을 과장, 왜곡한 저널리스트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고 필요한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그보다 더 절실한 문제는 그들의 필요에 따라 헌법이 정한 절차를 깨고 법정 절차조차 불문에 부쳐

특별기고



조용중

· 본회 원로회우
· 전 연합통신사장

진실보도외면 언론 책임 물어야

여론악화평계 정치권

청문회도 안연건

명백한 헌법유린

버리는 정치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정치판, 그들의 속내는 들으나 마나다. 일부언론의 문창극 보도 뒤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여론이 나빠졌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었다고. 그렇다면 언제부터 정치판을 이른바 여론에만 영합하느냐고 묻고 싶다. 정치란 무엇인가. 당당하게 그들이 말하는 여론을 거스르거나 설득할 용기는 없다고 해도 그것이 헌법이 정한 절차, 청문회를 여는 절차까지도 담아버린 핑계는 될 수 없다.

짧지 않은 헌정사를 통해서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그 절차를 짓밟았던 전례가 한 두 번이 아니지만 이번 문창극 사태는 대통령과 여야당이 서로의 패를 읽고 선수를 치는 포커게임과 흡사했다는 점에서 헌정사의 또 하나 창피한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서로가 짜고 헌법을 유린해놓고 누가 누굴 보고 헌법을 지키라거나 헌법 정신 또는 그 가치를 지키라고 할 것인가. 여야당 가릴 것 없고 언론도 다 함께 역사 앞에 엄중한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있다. 스탈린 시대의 저항시인 예프투 센코는 정의란 완행처럼 더디게 온다고 노래했었다. 그 말처럼 늦게라도 역사가 헌법유린의 책임을 묻는다면 오늘의 주역들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올 죄값을 치를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4]

본회 원로회우등 왜곡언론 질타 ‘입장’ 발표

대한언론인회(원로언론회원모임)가 선도, 우리사회 각계 목소리가 바른길을 외쳤음에도 바른길은 비뚤어지고 망가져 버린것이다.

대한언론인회가 지난 6월20일 발표한 ‘우리의 입장’은

1. 일부방송의 무책임한 왜곡 편파보도에 대한 경고와 응분의 문책
2. 대통령은 문창극 총리 후보에 대한 동의 요청 절차를 조속히 밟을것
3.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명정대한 총리후보 청문회 처리 등 7개항의 성명이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입장’이 발표된 3일후인 23일 ‘선진화 시민운동’이 주관, 각계인사 1만5천명이 서명한 “문창극 총리지명자는 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힐수 있어야 한다”는 등의 성명서가 발표됐다.

문창극 총리후보 지명서 사퇴까지



대한언론인회 원로회우들이 프레스센터에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이와는 따로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등 원로들은 문창극 후보자를 친일파로 씌워 인격살인을 가한 방송보도를 규탄 했으며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또 92세의 장경순 전 국회부의장은 20일 광화문광장에서 <문창극 청문회 국민은 진실을 알고 싶다.>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하기도 했다.

대한언론인회 원로와 1만5천여명의 각 계인사 성명발표 이후 진실이 점차 표출되면서 중앙일보 등 중앙언론과 뉴 데일리 등 인터넷신문이 호응, 특집을 함으로써 KBS의 왜곡 보도이후 부정적흐름이 차츰 정상적인 분위기로 바뀌었다. 특히 6월 20일밤의 MBC ‘긴급대담 문창극총리 후보자 논란’의 150분 특집방송과 6월23일자 동아일보 칼럼(김순덕 논설실장) ‘광우병 뺏치는 문창극보도’는 문창극 진실규명에 큰 몫을 했다.

2면으로 이어집니다.

“편파 왜곡보도 응분의 책임 져야”

우리는 이번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후 연일 빚어지고 있는 일련의 불행한 사태와 관련해 국가의 장래를 깊이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70년에 가까운 우리의 헌정사상 수많은 총리후보자들이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했지만 이번처럼 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이렇듯 나라를 혼란에 빠지게 한 예는 일찍이 없었다. 우리는 사태의 추이에 따라서 앞으로 더욱 심각한 정치적·사회적 후유증이 야기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우선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사실은 이번 문 후보 파동이 일부 방송의 무책임한 편파 왜곡 보도로 인해 증폭된 점이다. 일부 방송은 문 후보 지명이 발표되자 즉시 문 후보가 3년 전인 2011년 자신이 장로로 있는 교회에서 신도들에게 행한 강연의 일부 내용을 문제 삼아 문 후보를 ‘친일’로 몰아붙이는 무책임한 보도 행태를

문창극사태관련 본회 원로 회우등 ‘우리의 입장’

보였다.

3. 문 후보의 강연 동영상상 직접 들어본 많은 사람들은 이 보도가 전체 문맥을 고의적으로 거두절미한 심각한 편파 왜곡 기사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문 후보의 강연핵심은 기독교의 교리에 입각해 하나님이 동북아시아의 개막을 맞아 한국을 세계의 중심국가, 세계의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가졌으므로 한국 기독교도들이 더욱 분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문 후보는 그 동안 우리 민족이 겪은 수난과 고통은 모두가 우리민족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며 오늘의 한국으로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해석했다.

4. 그런데 방송보도는 문후보가 ‘일제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이고 ‘남북분단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해 마치 문후보가 식민지배

와 분단을 정당화한 것 처럼 묘사했다. 방송은 또한 문 후보가 위안부문제 발언에 관해 ‘일본 측의 형식적이고 말 뿐인 사과보다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더욱 중요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해명했음에도 계속 문제를 삼고 과거 조선조의 지배계층과 유산층의 근로기피 경향을 지적한 것을 민족성을 비하했다고 비약하는 보도를 했다. 이들 일부보도는 한·일 간 역사문제로 예민하게 된 국민들의 민족감정에 불을 댕겨 이번 사태의 내막을 잘 모르는 일부 국민들의 분노와 혐오감을 부추겼다.

5. 따라서 우리는 박근혜대통령이 총리후보를 지명한 이상 조속히 동의 요청 절차를 밟아야하며 문 후보 역시 자신의 진정한 소신을 뚜렷이 밝혀야한다.

6. 우리는 이 사태와 관련해서 국회

도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

7. 이번에 무책임한 보도로 국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오도한 데 책임있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와 응분의 책임추궁이 있어야한다고 믿는다. [4]

〈참석자 명단〉가나다순

김경래(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김은구(전 KBS 이사)
남시욱(전 문화일보 사장)
노철용(전 경향신문사장)
배병휴(전 매일경제 주필)
신동호(전 조선일보 주필)
신우식(전 서울신문 사장)
유지호(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제재형(전 대한언론인회 회장)
조용중(전 연합통신 사장)
최서영(전 코리아헤럴드 내외경제 사장)
최우석(전 중앙일보 주필)
홍순일(전 코리아타임스 편집국장)
황경춘(전 AP통신 서울지국장)

문창극 사태관련 ‘선진화 시민운동’의 성명서

우리는 문창극 총리지명자에 대한 언론의 검증과정을 지켜보면서 왜곡 보도와 마녀사냥식 인격살인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KBS가 문창극 지명자가 교회에서 한 강연의 일부만 인용하여 문창극씨를 친일, 반민족으로 몰아간 것은 언론의 본분을 망각한 너무도 중대한 잘못이다. 문창극씨의 교회강연 내용을 동영상으로 본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KBS의 심각한 사실왜곡을 고발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사실왜곡과 그 결과에 의한 오도된

여론몰이로 청문회도 없이 문창극씨가 낙마한다면 우리사회가 합리와 상식을 외면하고 야만(野蠻)의 나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창극씨가 총리가 되느냐 못되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또 언론인 출신 총리후보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언론인 출신 지명자에 대한 사전 검증이 미흡할 수도 있다. 중요

한 점은 KBS라는 공영방송의 왜곡보도에 입각해서 우리사회가 중요한 사안을 잘못 결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며 또 KBS의 왜곡보도도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문창극씨의 총리로서의 적합성 여부는 반드시 청문회에서 충분히 검증되어야 한다. 문창극씨는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국회도 자

신에게 주어진 책무에 따라 엄중히 검증해야 하고, 모든 국민은 현장중계를 통해 청문회 과정을 시청하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청문회도 없이 문창극씨가 사퇴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청문회도 열리지 않고 낙마한다면 이는 왜곡보도와 마녀사냥식 여론몰이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 될 것이다. [4]

1면에서 이어집니다.

6월11일 KBS뉴스의 문창극보도(문창극 후보자가 교회강연에서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이어진 남북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란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10여일만이었다. 그러나 24일 문창극후보가 ‘자진사퇴’를 발표, 다시 여론이 요동치게 되었다.

문창극 후보는 △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인권 그리고 천부적인 권리이며 다수결에 의해서도 훼손될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키는 제도다.

△ 법을 만들고 법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곳이 국회인데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 중에서도 이 신성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사퇴하라고 했다면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을 깨면 이 나라는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 언론의 생명은 진실보도이다. 우리 언론이 진실을 외면한다면 이나라 민주주의는 희망이 없다는 퇴임의 변을 말하고 “저는 박근혜대통령님을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지금 시점에서 사퇴하는 것이 박대통령님을 도와드리는 것이라

생각하고 자진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와같이 문창극 총리후보 파동은 일단 끝났지만 여진은 계속 되고있다. 사퇴 다음날 언론은

〈국민 눈·귀 속인 중대범죄— KBS 개조대상/ 문 후보, 사퇴아니라 피살이다/ 보수후보 못지킨 보수정권— 국정운영부담〉(중앙일보)

〈文 낙마, 검증실패야한 여론몰이 탓/ KBS 짜깁기 보도 묵과못해/ 세 번째 총리낙마 박대통령은 국민앞에 죄송하지 않은가〉(동아일보)

〈또 인사참사…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경향신문)

〈여론재판에 문도 못연 인사청문회/ 대독총리에 추기경급 자격요구/ 청문회 안하는건 헌정과파/위기의 靑, 연이은 실패에 지지층까지 이탈〉(조선일보) 이상과 같은 지면을 내놓고 있었다.

또 방송심의위원회는 문제의 KBS 9시 뉴스를 심의 대상으로 올렸고 선진화 시민운동 등 단체들은 7월1일 KBS 본관 앞에서 KBS규탄과 수신료 납부거부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4]

문창극의 ‘말’ 김삿갓의 ‘詩’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문창극이 몇 년 전 교회 강연에서 했다는 말과 대학 강단에서 한 말을 놓고 갑론을박 세상이 시끄럽다.

勞組 천국이 되어 사장까지 내쫓아 버린 외눈박이 방송에서 문창극의 강연 내용을 거두절미하고 일방적으로 왜곡한 내용을 놓고 야당에서는 문창극을 역사 인식이 잘 못 돼 있는 몹쓸 놈, 죽일 놈으로 몰아가며 대통령에게 총리후보 지명을 철회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야당의 공세가 그의 낙마



이석희

·본회 논설위원
·전 KBS 보도국장

를 통해 대통령의 인사,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타격을 가함으로써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식물 정부로 낙인찍으려는 듯한 정략을 막기 위해 문창극을 옹호하는 쪽에 서서 그가 말한 의도와 문맥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느냐고 맞서고 있다. 그리고 상당수 사람들은 단편적인 부분, 선동적이고 인상

적인 대목을 놓고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떠돌고 있다.

그 모습이 마치 시골을 방랑하던 김

3면으로 이어집니다.

‘대통령보좌 국무총리’ 그 虛와 實

건국 이후 66년 동안 대통령은 이승만부터 박근혜까지 11명이다. 그러면 대통령에 의해 발탁되어 국무총리 반열에 오른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군이 반열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정식 총리는 초대 이범석부터 42대 정홍원까지 42명이지만 국회임명동의를 받지 못한 서리 6명, 그리고 5·16 직후 군사정권 당시 내각수반 4명을 포함해서 52명이다. 그러나 총리를 2번 재임한 4명(장면, 백두진, 김종필, 고건)이 있어 수적으로는 48명이다. 그들은 총리제도가 없던 6년을 제외하고 60년 동안 평균 1년 1개월 남짓 재임했다. 물론 총리로 지명되었다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퇴한 김태호, 김용준, 안대희, 문창극은 포함되지 않는다.

알다시피 제왕이나 대통령은 쟁취하거나 운명적으로 승계되지만 재상이나 영의정 그리고 국무총리는 집권자에 의해 임명되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되면 선택될 수 있는 자리라고 본다. 그런데 국무총리는 임명될 때 며칠 동안 뉴스거리가 되지만 그 후로는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 같기도 해서 국무총리 이름을 아는 국민은 23%에 불과하다는 최근 보도가 있었다. 그렇다면 국무총리의 역할은 무엇일까?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요약하면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에 관한 문서에의 부서(副署)권과 국회 출석 발언권을 가진다. 또한 국회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권과 해임건의권을 갖는 것 등이다.

이렇게 볼 때 국무총리는 옛날 중국의 재상이나, 조선시대 영의정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의 자리라고 일컬어진다.

그러나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부터 여·야 공히 ‘책임총리제’를 내세웠고 현재까지도 언론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책임총리’라는 용어는 법률이나 행정용어가 아니고 정치·언론계

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 권한이 있는 총리를 바라는 희망 섞인 용어라고 본다. 따라서 ‘책임총리’보다는 ‘실권(실세·powerful) 총리’가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재상이나 국무총리의 역할과 관련하여 한(漢)나라 재상 진평(陳平)의 말이나 국무총리를 2번에 걸쳐 6년 이상 재임한 김종필의 후임자에 대한 충고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재원

·본회 자문위원회 간사
·전 서울신문 정치부차장
·전 국무총리 정부비서관

人事-예산에 일정수준 권한주고 대통령주변 협조 있어야 제 역할

진평이 하루는 황제 앞에 불려갔다. 그는 황제가 감옥에 갇힌 죄수의 숫자와 국고의 내역을 물어도 모른다면서 담당 대신에게 답변을 미루고 재상의 역할에 대해 “재상은 위로는 천자를 보좌하고 음양을 가지런히 하며, 세월의 변화에 순응해야 한다. 아래로는 만물이 제자리를 잡도록 해야 하며, 밖으로는 주변 오랑캐를 잘 다스리고, 안으로는 백성들을 친히 보살피고, 부하 관리들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독여야 한다.(宰相者 上佐天子 理陰陽 順四時 下遂萬物之宜 外鎮撫四夷諸侯 內親附百姓 使卿大夫各得任其職也)”라고 했다.

또한 김종필은 후임 고(故) 박태준 총리에게 “총리가 되면 고통이 많을 거다. 때로는 모르는 것도 아는 척, 아는 것도 모르는 척 해야 한다. 그러나 묵묵히 대통령을 보필해야 한다.”고 했다.

역대 대통령의 국무총리 운용

이승만 대통령은 12년 동안 총리 5명과 서리 3명 등 8명을 총리 자리에 앉히고 그때그때 정치 상황에 맞게 활용했다. 초대 총리 임명 과정에서 김성수, 신익희, 조소앙 등 유력 인사들을 제치고 예상 외로 이복 출신 목사인 이윤영 의원을 지명하여 국회 인준을 못 받아 국무총리 임명과정에서 국회와의 시련이 시작됐다.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이범석을 정치적 갈등으로 해임했고, 그 후 장면(대미외교), 장택상(개헌), 백두진(전후 복구), 변영태(유엔 외교) 등 슈퍼스타답게 상황에 따라 총리들을 보좌역으로 활용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8년 동안 내각수반 3명과 5명의 국무총리를 시대 상황에 맞게 인물을 선택하여 적극 활용했다. 최두선(방탄내각),

키지 못했고 원점으로 회귀시켜(한명숙) 정권을 마무리(한덕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3명의 총리 중 테마(특임)별로 총리를 기용하여 자원외교(한승수), 세종시 계획 수정(정운찬) 등을 꾀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최대 공약인 대운하를 축소하여 4대강 사업(김황식)으로 끝맺었다.

이상에서 살펴볼 때 역대 정권 중 국무총리를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지향하는 정책 방향에 맞게 활용한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대통령 정도라고 본다. 그중에서도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의 국무총리 활용은 유사한 점이 많다. 특히 잠재적 정권 경쟁자에게는 일정한 한계 내에서 그 역량을 활용했다. 이승만이 이범석, 장면에 대한 경계나 박정희의 정일권, 김종필에 대한 견제는 분명했다. 특히 박정희는 군과 재벌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금했다. 김영삼의 이회창 경질도 정치적 경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국무총리 권한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5년 단임제가 정착됐고 정치·사회·경제가 다양화된 오늘날에는 노출되지 않은 정치 경쟁자는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한국의 국무총리는 제도보다는 운용의 면에서 실효를 견을 수 있다고 본다. 그 요건은 우선 대통령의 국무총리에 대한 신뢰이다.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러닝메이트(협조자)로 보고 인사 예산에 일정 수준의 권한을 위임해서 총리에 대한 공무원 사회의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여기에는 대통령 주변의 협조가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총리 자신의 역량과 확고한 사명감이다. 그리고 상황에 맞는 인물의 선택이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할 때 국무총리 제도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그 예는 대통령 권한이 가장 막강했던 유신헌법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은 김종필, 최규하, 신현확, 박충훈, 남덕우 등 5명이다. 이들은 각기 정치적으로(김종필), 행정적으로(최규하), 해박한 지식과 굳건한 자세로(신현확), 경제 안정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으로(남덕우) 대통령을 보필해서 성공한 총리들이라고 본다. [국무총리]

정일권(돌격내각), 백두진(선거내각), 김종필(정치내각) 최규하(실천내각) 등을 개발 연대에 맞게 장기간 활용했다.

전두환 대통령은 7년 동안 총리 6명과 서리 1명을 평균 1년씩 교체하여 국면을 전환했고 국민화합차원에서 건국 후 최초로 호남 출신 총리(김상협, 진의종, 이한기)를 기용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앞선 장기간의 군사문화정권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5년 동안 학자 출신만 5명(이현재, 강영훈, 노재봉, 정원식, 현승중)을 기용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5년간에 6명의 총리를 다양한 분야에서 발탁하여 예산을 깨는 인사를 했다. 군인(황인성), 법조인(이회창), 학자(이영덕, 이흥구, 이수성), 관료(고건) 등을 선택했으나 정책 추진 방향과는 일치하지 않게 운영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역대 정부 중 최초로 공동정부를 운영하여 초기에는 자민련 측에 총리를 맡겨(김종필, 박태준, 이한동) 실질적인 지명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자민련과 결별한 후 장상, 장대한 등을 지명하였으나 국회 인준에 실패하여 정권 유지에 총리를 활용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4명의 총리를 임명하여 정권 초기의 안정(고건)을 도모하고 분권을 시도(이해찬)했으나 정착시

窃取天桃善奉養(불로장생의 천도복숭아를 훔쳐 아버님을 잘 봉양하는 구나) 이렇게 해서 김삿갓은 壽宴이라는 반전의 名詩를 남기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반전의 테크닉과 반전의 묘미 때문에 김삿갓의 풍류시는 200년이 가깝도록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기억에 남는 것이다.

글이나 말, 드라마 연극 등에는 반전과 비유가 있다. 반전과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깊이 있는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 그들은 너무 고지식해서 융통성이 없거나 좀 모자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재미가 없다.

문창극이 수난을 겪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사회에 문맥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고 문맥도 모르고 떠들고 설치는 팔꾼이들이 많다는 사실이 놀랍다. 꼬치꼬치 따질 줄만 알았지 융통성 없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자꾸 각박해지고 재미없어 지고 있다. 게다가 정치권은 그런 일을 정치적으로 악용까지하려 들고 있으니... [문창극]

2면에서 이어집니다.

삿갓이 어느 회갑 잔치집에 들러 壽宴詩를 쓰던 모습을 연상케 한다. 김삿갓은 어느 날 방랑길에 잔치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그는 축시를 지어주고 잔치상을 받기로 하고 붓을 잡았다. 먼저 환갑을 맞은 노인에게 묘사하기 시작했다.

彼坐老人不似人 (저기 앉은 저 노인 사람 같지 않구나)

잔치집에 와서 주인공인 ‘노인을 사람 같지 않다’니... 저놈 끌어내라고 아우성과 소란이 일고 있는데도 김삿갓은 묵묵히 다음 詩句를 이어갔다.

何日何時降神仙 (어느 날 어느 때 신께서 내려오셨나)

‘사람 같지 않다’던 대목이 ‘신선이 내려온 것’이라는 뜻으로 이어지자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던 사람들까지도 그의 솜씨에 모두 감탄했다.

김삿갓은 이어 노인의 아들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써 내려 갔다.

膝下七子皆盜賊(슬하에 아들 일곱이 모두 도둑이구나)

주인영감 옆에 있던 아들들은 자기들을 도둑이라고 하자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분을 참지 못하고 있는 데 김삿갓은 상 위에 놓인 복숭아를 보고 시를 마무리 했다.

犯法者 엄벌주의로 ‘法治’ 확립을

세월호 대참사 수습과 가야 할 길

국가적 비극인 세월호 침몰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다. 행정부를 비롯한 정치계, 사법계가 더 이상 불법을 용인하는 병폐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고 적폐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아직도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건망증이 심한 국민이라 곧 잊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월드컵 기간 중에는 세월호 사건 특조조차 지지부진하다. 국회는 부패일소를 위하여 ‘김영란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더니 5월 국회를 허송하고 여론의 지탄을 받더니 6월말이나 돼서야 가까스로 원구성을 마쳤다. 국회의원이거나 국회직원의 유관단체 낙산 인사를 막겠다고 정가에서 ‘입법 마피아’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유착관계가 심하여 해운업계 비리에 연루된 의원들조차 아직은 활보하고 있는 현상이다.

적폐해소 변한것 하나도 없어

퇴임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을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정부에서조차 공직자윤리법을 회피하면서까지 ‘관피아’의 족쇄를 끊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전관예우로 때돈을 벌고, 정당이나 이익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재판까지 늦추어 최루탄 의원의 유죄선고에 3년이나 걸리고 있다.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원 제명건을 처리하지 않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기다리겠다고 한다. 현직 국회의원 중에도 범죄전과자가 30명이나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에도 전과자가 1,000명에 달한다고 하니 이들에게 부정부패 척결의 입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도 위헌정당해산의 가처분을 하지 않아 수십억원의 국비를 횡령하게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입헌주의와 법치주의가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헌법은 이들 입법·행정·사법 공무원이 모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을 위하여 좋은 입법, 공정한 행정, 신속한 재판을 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하도록 선서까지 하고 있으나 이들은 헌법상의 의무를 무시하고, 개인의 이익을 쫓아 정당이나 협회, 이익단체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다.

공무원 교육훈련 거쳐 충원을

물론 대다수의 공무원은 사기업체 직원이나 임원보다 훨씬 적은 봉급을 받으면서도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이 사리사욕에 빠져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정당 눈치 보기에 바쁘며 노후를 위한다는 핑계로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다. 공무원의 부정부패 행위는 국가기강을 좀먹고 국민을 불행에 빠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엄중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제까지의 행정시험위주의 채용에서 민간인의 채용을 반수 이상 하겠다고 하여 인사혁신처까지 만들겠다고 한다. 공무원채용시험제도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면도 있으나 앞으로는 교육훈련을 통한 충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무원채용에 있어서 변호사 자격자나 회계사 자격자 등을 엄정 선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공무원사회의 경쟁도 유발될 것이고 공무원수행의 질도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국가관 함양이다. 독일 공무원법처럼 채용시에 헌법수호의 서약을 받고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에는 즉각 해임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채용에 있어 신원조사를 철저히 하여 급진단체 가입자나 전과자를 공직에서 배제하여야 하겠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도록 훈련하고 헌법정신을 함양하도록 교육하여야 하며 현재와 같은 철밥통 종신고용계약도 철폐되어야 하겠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부정부패 사회에서 독야청청하기를 바랄 수는 없다. 민주화 이후 자유를 자유방임이라 오해하여 규범을 적대시하는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을 지키면 바보요, 요령껏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여 치부만 하면 성공했다는 물질만능주의, 부

특별기고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법 어기면 손해’ 확신 심어줘야

사형폐지 대신 100년이상 刑 선고

직업데모꾼들 체벌-벌금 병과

공무원 채용때 급진단체 가입자 배제 헌법수호 서약 받아야

패사고가 팽배하고 있다. 법원에는 위증범이 늘어나 재판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사회에는 사기범, 명예훼손범이 범람하고 있다. 과립치범도 중형을 겁내지 않고 사면·복권으로 정치사회에 복귀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사기를 일삼는 사람도 신용회복이 되고 있기에 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있으며, 가히 무법천지가 되어 있다. 그 이유는 경찰, 검찰, 법관들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범집행의 부작용 때문이다.

국가재건은 국민의식개조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이 범규범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되거나 손해가 된다는 확신을 심어 주어야 한다. 범집행을 하는 경찰, 검찰은 범죄자는 무조건 체포해서 기소해야 한다. 기소편의주의 때문에 벌금만 무는 범죄자가 많아지고 있다. 또 기소되더라도 법원에서 무죄, 집행유예, 형감경 등의 온정판결이 속출하고 있다. 이제까지 법조공무원들은 교육형이라는 미명하에 온정주의에 빠져 있으며 개인의 권리를 공익보다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국가에 관한 범죄나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법자들에게 최저한의 형벌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시정되어야 한다.

가석방·사면·복권 억제해야

국민의 준범의식이 살아날 때까지 한시적으로나마 범죄자에게는 엄벌주의로 나가야 하며 가석방이나 사면·감형·복권은 억제되어야 한다. 법무부는 기결수를 훈육할 것이 아니라 형을 엄정히 집행해야 한다. 형법을 개정하여 100년 이상 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교도소 생활을 일반가정 생활보다도 안락하게 하는 것은 국민감정에 위반된다. 범죄자 보호가 우선이었던 정책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키는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 일단 아노미현상이 타파된 뒤에는 형법을 고쳐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무기형 대신에 100년 이상의 형벌에 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엄벌주의는 비단 형사법뿐만 아니라 경제사범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벌금액수가 웬만할 경우 고통을 느끼지 않는 부자가 많아지고 있다. 이들에게 벌금형이란 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재범을 막기 위하여 ‘유병언법’을 만들어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경제적·사회적으로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직업데모꾼들, 국보법 전과자들에 대해서는 체벌뿐만 아니라 역대 벌금형을 병과하여 노역장 유치를 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공안정국의 도래라고 하여 독재 운운할 것이나 법질서의 유지는 국가와 공공의 이익이기 때문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독일처럼 민주적 기본질서침해 방지법을 만들어 국가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겠다. 우리는 분단국가이기에 통일국가인 독일이나 미국보다 관대한 형사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이번 기회에 한국도 선진법치국가로 진입해야 하겠다.

세월호 침몰의 비극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우리는 재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입법을 보완해야 하며 기존의 법이라도 엄격히 집행하여 대한민국을 진정한 입헌국가, 법치국가로 재건하여야 하겠다. 이것이야말로 국가개조와 국민통합의 첩경인 것이다. [국문]

신문협회, 재난보도준칙 마련키로

신문협회(회장 송필호)는 5월 22일 있는 이사회에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 재난에 대비한 언론계 공동 재난보도준칙을 만들기로 결의했다. 준칙은 신문

협회, 방송협회, 신문방송편집인협회,기자협회, 신문윤리위원회 등 5개 단체가 주체가 돼 제정하기로 했다.

정무장관 - 국민소통처 신설 필요

세월호 대참사 수습과 가야 할 길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에 국가안보실,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통상교섭기능을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처로 격상하는 등 소폭의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로 현재 중앙정부의 중앙행정기관은 5실(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2원, 17부, 3처, 6위원회(국가인권위, 방송통신위, 공정거래위, 금융위, 국민권익위, 원자력안전위), 18청으로 총 51개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설계 과정에서 또 다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미흡한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제언과 정부 제출 조직개편안에 대한 보완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무·홍보기능 강화할 필요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국정운영의 핵심이고 최후의 보루 기능을 담당한다.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비서실의 각 수석비서관은 각각의 유관 부처와 역할을 분담하면서 부처의 지원을 받고 있고, 안보실장과 각 수석비서관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유관 부처에서 보완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무와 홍보 수석비서관은 유관 부처가 명확하지 않아 부처 지원 없이 해당 분야에 대하여 홀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다. 수석비서관 개인과 부서의 역량이 빠져나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 때 그 정치적 부담은 고스란히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타 수석비서관처럼 부처 조직으로 정무와 홍보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데, 정무장관과 국민소통처 신설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정무수석비서관이 정무장관의 역할도 할 수 있으나 그 정도의 역량을 갖춘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본다.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대 국회와 정당 의사소통을 주로 하고 정무장관은 국회와 정당(특히 야당)의 의견수렴과 소통을 주로 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국민소통처는 지금의 문화체육관광부의 대국민 국정홍보 성격을 넘어서 국민여론과 언론계의 의견을 청와대와 정부로 전달하는 성격에 치중한다면, 국정운영이 원활해지고 국민의 불만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무장관과 국민소통처는 작은 조직으로 정원 증가 효과는 크지 않다. 따라서 정무장관과 국민소통처 신설 방안에 대하여 대통령과 정부가 정부조직 확대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고, 여야간에 정치적 합의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정부는 6월11일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사회·문화 부총리(교육부 장관 겸임)를 신설하고, 안전행정부의 안전총괄기능, 소방방재청 기능, 해양경찰청 기능(단,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이관)을 통합하여 국무총리소속 국가안전처(국무위원급)를 신설한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윤리·복무·연금 포함) 기능을 국무총리소속 신설 인사혁신처(차관급)로 이관하며 안전행 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변경되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폐지된다.

정부조직개편안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수는 늘어나지 않

특별기고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전 한국행정학회 부회장

정무·홍보비서관
부처조직 없어
개인 역량 매달려야

정부조직 개편안
교육부총리 실효 의문
'국가안전처' 명칭
'국민안전처'로 해야

소방·구조 구급 업무
정부 보조금 확대를

지만(2청 폐지, 2처 설치), 부총리 직위가 1개 신설되고 차관급 직위 3개(행정자치부 단수 차관)가 폐지되고 장관급 1개 차관급 2개가 설치되어 직위는 다소 상향 조정된다. 정부조직 확대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토의 과정에서 수정·보완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사회관계부처 정책 조정 어려움

첫째, 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총리(교육부 장관 겸임)를 신설한다고 하였는데, 그 실효성에 대하여 재검토했으면 한다. 사회분야 정책조정 대부분은 재원의 문제로 사회부처와 기획재정부 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회부처 간 중복사업의 조정도 결국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부총리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부총리, 책임장관 등 역대정부에서 총리와 장관 사이에 조정 기제(機制)를 두었으나 경제부총리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오히려 또 하나의 계층으로 작용하여 의사결정의 효율성만 저해한 경험이 있다.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 위상만 가진 채 사회 부처에 대한 재정적 조정 수단 없이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는 효과적으로 정책을 조정하기 어렵다.

둘째, 국가안전처의 명칭과 소속을 재검토했으면 한다. '국가안전'은 National Security, 또는 National Intelligence로 오인될 수 있는데, 국민들의 안전을 총괄한다고 하면 Citizen's Safety 개념의 '국민안전'으로 수정했으면 한다. 또한 처장이 국무위원이므로(현재 처장 3인은 차관급)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하기보다는 행정각부의 하나로 설치했으면 한다. 즉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경찰청을 외청으로 두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 경우 기존해경의 정보·수사 기능이 경찰청으로 이관되지만 국민안전부 장관 하에서 조율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재난 현장에서 경찰, 해경, 소방방재 전문인력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자는 소방공무원들의 주장은 지방자치를 확대·강화하자는 관점과 충돌하므로 당장 추진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대신 소방·구조구급 업무에 대한 재정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의 보조금 확대를 제안한다.

오래끝면 조직안정성 해칠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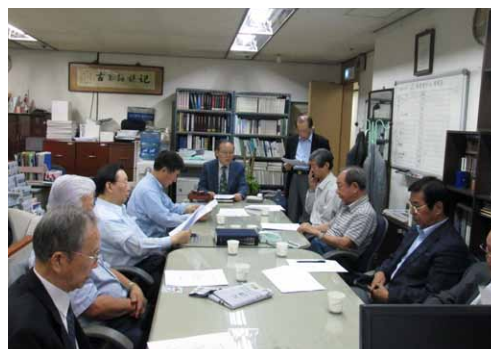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어떤 행정기관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정부조직의 설계와 변경은 정치적 결단이고 선택이다. 어떤 조직개편 대안도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하나의 대안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오히려 조직개편 논의가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면 조직 안정성을 해치고 공무원의 사기를 저해하며 결국 정부의 정책 추진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충실하게 논의하되 정파적 논쟁 속에서 표류시키지 않고 회기 내에 처리하기를 기대한다. [4]

대한언론 인터넷신문 창간등 논의

본회 제142차 이사회 개최

제142차 이사회가 지난 6월 13일 오전 10시 30분 본회 회의실에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토의했다. 상반기 업무보고와 하반기 사업계획, 신입회원 가입 인준, 의료비지원 등 여러 가지 사

안을 다룬 이날 이사회에서는 특히 기획조정위원회(위원장 오건환)와 사이버위원회(위원장 노상국)가 각각 건의한 양평소재 바비엣 발효밸리(19면 광고문안 참조)건과 인터넷 신문 창간문제를



본회 사무실에서 열린 제142차 이사회.

심도있게 논의 했다.

인터넷 신문 창간의 경우는 막대한 예산 조달방법과 필수 인력 확보 등 향후 과제 등을 소위원회에서 다시 검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회장단에 보고한 후 다음 이사회에서 재론하기로 했고 바비엣 양평 발효밸리는 회원들의 자유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4]

참사 악용세력 철저히 차단해야

세월호 대참사 수습과 가야 할 길

한국 역사상 최악의 해양 참사인 세월호 사고는 고도성장 속의 미완성 사회가 가지고 있던 약점들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나면 개인은 물론 국가도 고스란히 치부를 보인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35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나 구호작업 지연과 의료설비 미비 등의 2차 피해로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일본 사회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이 집중 부각됐다. 미국도 9·11테러에 대한 사전대응 부실과 발생당일의 혼돈으로 초강대국의 치부를 드러냈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 국민의 대형 참사에 대한 반응은 우리와 달랐다. 일본은 국민들이 질서정연하게 순응하면서 고난을 이겨냈고 미국은 자신들의 자유권을 희생하면서 더 강하고 안전한 국가를 만들었다. 우리는 어떤가?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고 희생된 학생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참사를 이용하기에 바빴다. 참사를 놓고 너무나 부정적이고 극한대립 상태로 치달았다. 어떻게 하면 이런 극한적 대립상태에 있는 대한민국을 치유할 것인지 하나씩 짚어보고 해결책을 논하려고 한다.

참사는 고질적 병폐의 결과

참사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겹쳐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현 시대의 사회가 만들어 낸 것이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어떤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불행한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등 기존의 법규에는 안전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수립돼 있다. 또한 위기관련 규범이 3,200여 개로 더 이상의 규제는 필요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법을 집행하고 준수해야 할 당사자들의 부조리, 무책임, 고용유지를 위한 자발적 묵계 등 사회적 위험요소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덕심과 의협심을 함양할 교육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9·11테러가 발생했을 때 부시 대통령은 플로리다에 있었다. 테러발생 보고를 받고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대통령 전용기 조종사는 핵공격, 화학공격 등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규범이 있으나 항공기를 납치한 테러범에 대한 대응규범이 없어 당황했다고 실토했다. 일본 문화는 교본을 신봉한다.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때에는 교본에 없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순발력 부족 때문에 문제가 됐다. 결국 사고나 재난은 국가의 경제력과 국민의 의식 수준에 따라 경미해지거나 참사로 이어진다.

국민의 성숙한 자세 긴요

한 실종자 가족이 ‘외부인이 청와대 항의 방문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과거 촛불집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권퇴진을 시도하던 세력들은 동일 성향의 정권 하에서도 반대를 일삼으며 사회적, 경제적 이득을 추구했다. 미국은 9·11 테러로 3,000명에 가까운 희생자와 10조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봤으며 테러 전후 대응과정에서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퇴진 요구는 나오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근본적으로 세월호와 같은 특정 사고에 누군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일은 없다. 일본도 대지진 과정에서의 미숙한 대응에도 국민들은 성숙된 자세를 보였다. 안전을 부르짖으면서 더 큰 위험인 북한 정권과 핵보유에 대해 입을 닫는 세력은 진정성이 없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근간을 흔드는 세력을 과감히 뿌리 뽑지 않는 한 진정으로 안전한 국가는 만들 수 없다.

문제의식이 결여된 청소년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인간적 혐오성 글을 올렸다. 올린 이유가 ‘그냥 심심해서’라는 대답도 있었다. 미국은 댓글을 잘 달지 않는다. 또한 달더라도 눈살을 찌푸릴 정도는 아니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국민의 의식도 높아져야 한다. 국민들이 도를 벗어나면 불이익을 받는다

해외서 본 시각

특별기고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학
·종신교수
·환경공학

위기관련 규제
더 만들기 보다
제대로 지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SNS등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자
一罰百戒로 엄벌

오보-추측성 보도
진영논리 매몰
언론도 대오각성해야

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

언론이 분란 기폭제 돼선 안 돼

언론은 이념논쟁과 오락성에 파묻혀 가장 중요한 고발 기능을 잃었다. 운항해서는 안 될 선박이 과적하면서 버젓이 다닌 것을 찾아 경종을 울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진영논리에 자신의 주장을 포장하기에 바쁘지 않았나 반성해야 한다. 더구나 세월호 사고에서 언론은 사건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한다는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오보와 추측성 보도를 남발한 것도 모자라 사소한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과대포장하고 슬픔과 분노를 조장했다. 이런 보도로 정부를 갈팡질팡하는 무능한 집단으로 만들어 위기관리 및 대응능력이 미흡했다는 여론을 유발하는데 기여한 면이 있다. 미국의 주요 언론은 세월호 사고에 대해 한국 매체에서 발췌한 상반되는 주장을 공정하게 제시하고 독자나 시청자들이 판단하도록 했다. 한국의 언론은 자신의 진영에 유리한 논리를 만들어 두 팀이 치열하게 다투는 운동경기처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기는 것이 정의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념논쟁은 정치기사에서 끝내야지 다른 것까지 흑백논쟁에 파묻혀 국민들의 알 권리를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정부 무능은 사실전달 능력 부족

대통령이 두 번에 걸친 사고에서 정부의 무능을 인정한 것은 옳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일이 자신의 책임이고 자신이 부족해 발생한 것이라 사과했지 정부의 무능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한국의 여론은 무척 쉽게 조장 당한다. 광우병 촛불시위 때의 주장들은 터무니없었지만 청소년들과 주부들은 물론 식자들까지 쉽게 넘어갔다. 이성적 판단과 미래지향적 사고를 갖지 못 하고 감성적으로 반응하여 선동에 쉽게 넘어가서는 선진국의 국민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소통부족이라기 보다 사실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는 관료화된 조직의 전형적인 문제이다.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직접 전달해야 더 많은 국민들에게 전파될 수 있다. 지도자의 필수조건은 사실전달능력(설득력)이다.

국가개조 제언

세월호 사고로 패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역경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 역사적으로 성공한 혁명은 있지만 성공한 개혁은 드물었다. 어느 누구도 쉽게 기득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국가개조를 하려면 국민 모두 인정하는 당위성이 있어야 한다. 여·야가 협력해서 국민이 동의하는 백년대계의 개조안을 만들고, 신뢰를 바탕으로 기득권층을 설득하고 비판을 수용하면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의식개조에 동참해야 한다. 남들은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자신은 지키지 않는 편리한 잣대는 버려야 한다. ‘국민의식 선진화 운동’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남을 배려하며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정부는 대대적으로 규제를 통폐합하고 선진국처럼 투명하게 만들며, 철저한 자본주의에 입각한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중심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되, 부도덕한 기업주는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관피아’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규는 물론 감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개조에 성공하면 부강한 선진국이 되고 실패하면 무슨 일이든 남 탓을 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불행한 2류 국가가 된다. 언론도 정화되지 않고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국민을 불만과 불안 속에서 살게 만든다. 이제 국가개조는 온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필수불가결한 역사적 사명이다. 성공적으로 국가개조를 하여 온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하며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국문]

民意외면 국회 두고만 봐야하나

세월호 대참사 수습과 가야 할 길

“우리들은 국민의 머슴(公僕)입니다. 혹시나 자신의 이름을 날리거나 정치적 성공을 자랑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면 잘못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섬기고 성실하게 대변 하기 위해 왔다면 제대로 온 것입니다. 국정의 어떠한 숙제도 후손들에게 넘겨줘서는 안됩니다...”

미국의 상하원은 2년마다 선거가 끝나면 이듬해 1월3일 합동으로 새 의회의 개원식을 갖는다. 개원식에는 상원 100명, 하원 435명등 총535명의 의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참석한다.

개원식에 앞서 의원들은 의사당내 이곳저곳에서 목사나 선배 정치인들 앞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경에 손을 얹고 의원선서를 한다. 가족을 배석시키는 것은 의원으로서 직무태만과 독선과 아집, 그리고 위법과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효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맨 앞에 소개한 말은 2013년 1월3일 제113대 의회 개원식에서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적으로 행한 개원사의 한토막이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도 총선후 첫 개원국회에서 국회법 24조에 의거해 의원선서를 한다. 선서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지의 증진,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를 국익우선으로 양심에 따라 수행한다는 내용이다.

몇년전 한 정치학자가 20여개국의 국회의원들이 행한 선서의 정신과 내용을 공약의 실천, 직무의 성실도, 도덕성 등과 관련해 분석한 적이 있다. 그에 의하면 대체로 구미 정치적 선진국의 의원들은 적어도 70~90%를, 후진국의 경우 40~20% 정도를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진국 의원들은 헌법 등 각종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데 비해 후진국에서는 식은죽 먹듯 무시하고 위반한다. 또 의안의 심의와 처리에 있어 국익우선을 습관화한 반면 후진국에서는 私益과 政略의 우선이 일반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헌정의 역사는 올해로 62년. 이기간 동안에 있었던 역대 국회 가운데서 의정 운영의 생산성과 효율성, 의원들의 성실성과 도덕성, 국민의 신뢰성 면에서 가장 내실있고 충실했던 국회는 어느때였을까.

필자는 단연 제1대 국회 (1948.5.31~1950.5.30)를 꼽는다. 민주주의-민주정치에 대해 아무런 경험은 물론 거의 지식도 없는 초대 국회의원들이 40여일동안 각고의 연구와 토의 심의끝에 지금 내 놓아도 하나도 손색이 없는, 나라의 초석인 헌법을 비롯해 정부조직법 국회법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등을 제정한 것은 참으로 놀랍기만 하다. 민주주의에 관해 문외한이나 다름이 없는 초대의원들이 이처럼 뛰어난 입법활동을 할수있었던 배경과 원동력은 무엇일까.

모든 의원들은 약속이나 한듯 정략, 당략, 권력 욕심을 흔연히 버리고 오로지 하루빨리 번듯한 민주독립국을 세워야 한다는 국민의 열화같은 바람과 뜨거운 애국심으로 법안 심의에 임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사익, 당리를 깨끗이 버리고 오직 국리민복 우선의 자세로 일한 것이다. 지금은 초대의원들 모두 작고 했지만 숭고한 정신과 자세, 노력과 업적을 감안할때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초석을 세운 이분들을 ‘건국의 아버지들’로 영구히 기려야 할 것이다.

2대국회 이래 지금의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60년동안 국익우선을 외면한 당리 당략 정략대결과 상당수 의원들의 직무 태만과 유기, 부정비리에 따른 일탈로 국민들에게 분노와 국회불신 정치불신을 야기시켜온 예는 너무나 많았고 그로인해 국회해산론과 무용론이 이따금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4월 진도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의 어이없는 침몰로 300여명의 어린생명이 숨져 온 국민이 엄청난 충격과 슬픔에 잠겨있던 이래 70여일 동안 여야 정치권과 국회가 보여준 행태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을 지경이다.

여야는 즉각 정치휴전을 공동으로 선언한후 국회를 전면 가동시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조사를 서둘렀어야 했다. 아울러 국회와 관련상임위를



이성춘

- 본회 논설위원
-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 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장

私利-黨利버린

제헌국회만 제구실

의원정수 감축

세비삭감-특권 포기등

정치권약속

지켜진것 하나도 없어

특조위·국정감사

국회 직무태만도

감사받아야

매일 열어서 국무총리 이하 관계장관 기관장등을 불러 사망및 실종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구조및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각분야에 기생하는, 불법과 비리 반칙의 온상이 되고있는 각종 관피아들을 대대적으로 척결하도록 정부의 국가개조와 개혁을 촉구하고 적극 독려했어야 했다.

이처럼 어렵고 엄중한 상황에서는 여야도 선거도 당리 당략도 모두 접고 국민에게 다짐한 모든 활동과 대책을 국익우선의 차원에서 벌이고 추진했어야 하지 않은가.

이런 위급상황에 정부를 독려해 가장 기민하게 나서고 활동해야할 국회가 여야간의 이런저런 이견으로 5월29일부터 시작되는 19대국회 후반기의 원구성을 25일간이나 미룬것은 무책임의 극치라 하겠다. 원 구성이 지연되니 국회는 반쪽국회, 거의 식물국회나 다름이 없지 않은가. 여기에도 세월호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뒤늦게 겨우 구성한 후에는 관계기관보고의 선후에대한 여야의 이견으로 보름이상 시간을 허송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말할것도 없고 벌써부터 국민들은 도대체 어떻게해서 여객선 침몰로 300명이상의 목숨을 앗아가게 하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해수부 해경 선박회사 그리고 여러 감독기관의 나태와 무책임과 위법행위등 진실규명을 목빠지게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여야와 국회는 알량한 당리 당략으로 금싸라기 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작태를 보이고 있으니 이게 정치인가 민의를 대변하는 것인가.

올해부터 매년 2회로 나누어 실시키로한 국정감사의 시기에대해 육신각신 끝에 8월 9월로 합의한것도 우습기만하다. 세월호 관피아 해피아등을 따지는 감사는 당장 해야하지 않은가. 또한 4월국회서부터 표류하고 있는 공무원부패를 처벌하는 김영란법, 전관예우 금지및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법안, 범죄은닉재산 환수강화법안 등은 계속 낮잠을 자고있는 형편이다.

도대체 세월호사고 발생이후 70여일동안 여야와 국회와 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지금까지 총선거 때마다, 새국회가 시작될 때마다 지도급 정치인들은 거창한 정치개혁을 제기했다. 의원정수 대폭감소(안철수대표), 의원세비 30% 삭감(문재인의원), 의원 불체포와 면책등의 특권일부 내려놓기(여야당), 각종 의원특권 특혜의 자진 포기(여야당)등등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가지도 실천 이행한것이 없어 이제 국민들도 너무나 속아 아예 듣지도 않는다. 그러면서도 세비(연간 1억4000여만원), 사무실(45평), 보좌관 9명(정규직 7명, 인턴 2명), 이·미용실 사우나 체육실 의무실등의 무료이용, 의료보험료 면제, 철도와 비행기의 무료이용 등등, 이런 수준의 대우는 세계에서 6~7개국에 불과하다. 문제는 의원들의 활동의 내용과 수준, 즉 정치의 생산성 문제다. 한국보다 훨씬 못한 처우를 받아도 상당수의 다른나라 의원들은 그야말로 열심히 국익과 국민을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원들의 일반적인 직무태만과 국익보다 당리와 사리를 내세우는 무책임한 행태, 그리고 습관화된 반칙들을 과연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버젓이 국민 앞

에서 법에 규정된 의원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 하겠다고 약속하고는 대부분 지키지 않는 작태에 대해 의원들은 대오각성하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 두달이 넘도록 진상규명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대책, 그리고 이런 사고의 재발방지등 어느것하나 진지하게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여야당과 국회에 국민의 가슴은 폭발직전이다. 사실 이런식의 정당과 국회라면 앞으로 별로 기대할게 없을듯하다. 태만과 무책임으로 지내온 정당과 국회가 국민앞에 석고대죄할 방법은 단한가지 있다. 뒤늦게 가동되는 국회특별조사위도 그렇고 또 8월의 제1차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정치권과 국회의 직무 태만과 유기부터 조사하고 감사하는 일일 것이다.

왜들 이러는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언제까지 침묵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

日 집단자위권 확장주의가 문제

6·25남침전쟁 당시 일본이 파병한다는 설이 있었다. 그러자 이승만대통령은 “만약 일본 병정들이 온다면 공산군을 향했던 우리의 총부리를 돌려 일본군을 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6·25는 연합국이 일본에 승리하고 우리가 해방된 지 5년 만에 일어났다. 이승만대통령은 아직 가시지 않은 한국 사람의 일본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을 적절히 표현한 것이다.

세월은 그로부터 65년이 흘렀다. 한일관계가 정상화 된지도 올해로 49년째, 두 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크게 달라졌다. 우리도 달라지고 일본도 달라졌다. 이 모든 변화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6·25가 아직 끝나지 않은 1952년 4월 일본과 미국은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강화조약을 맺으면서, 동시에 동맹관계(미일안보조약)도 성립시켰다. 한국에서는 그 이듬해 6·25가 휴전이라는 형태로 일단 종료됐고 한국과 미국 간에도 동맹관계(한미상호방위조약)가 성립되었다. 한일 간의 적대관계도 공식으로는 1965년 6월의 협정체결로 일단 해소됐다. 이로써 한·미·일 3국은 공동의 목표(공산주의 확산억제)를 위해 안정된 상태에서 상호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었다.

자라보고 놀란가슴 솔뚜껑에 놀라

그러나 한국과 한국인은 자라(과거의 일본군국주의)보고 놀란 가슴, 솔뚜껑(오늘의 일본)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제 2기 정권(제 1기는 2006년)이 출범한 (2012년) 이래 우리는 점점 더 일본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구체적인 단초는 일본이 이른바 집단자위권을 행사해야겠다고 나선 데서 비롯된다. 일본패전 후에 태어난 세대로서는 최초의 일본내각수반이 된 아베(1954년생)는 일본헌법 9조(전쟁포기·군대 불보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는 제2기 내각총리대신이 된 이듬해(2013년)에 낸 책 <새로운 나라를 향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현 정부의 헌법해석으로는 미군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서 일본을 방위하지만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중략) ...마치 재산권은 있어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禁治産者’와도 같다”고 그는 말한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도 미국과 함께 쌍무적인 집단자위권 행사를 해야 하며, 이는 유엔헌장 51조(가맹국은 개별 또는 집단적 자위권이 있다)와도 부합된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상 아베의 주장이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다. 다만 우리와의 관계로 비추어볼 때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아베는 책에서, “일본의 주변국유사시 출동한 미군병사가 공해상에서 조난했을 때 구조에 나선 자위대가 적의 공격을 받으면 이를 피해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의 헌법해석대로라면 일본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못하게 되는데 이걸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한반도 유사시’ 대응이 관건

그는 ‘주변국유사시’라고 했지만, 국방장관 등 고위관리들은 서슴없이 ‘한반도유사시’를 명언하고 있으며, 그 경우 ‘일본인 구출’을 위해 자위대가 출동(집단자위권행사)해야 한다고도 말하고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이승만대통령의 6·25당시의 말과 함께, 그보다 60년 전 일본의 제 3대 수상이었던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가 말한 일본의 주권선과 이익선론(일본의 국경을 주권선, 조선 등 주권선의 외곽선)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멀리는 조선을 침략, 분탕질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명나라와 인도까지 쳐들어갈 전략(?)까지 품고 있었다는 사실 등 일본인 특유의 확장주의 근성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인 구출’이라는 구실아래 전쟁에 개입하면 그에 상응하는 이익도 추구하게 마련인 것이 국제관계의 관례였다.

따라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자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로부터 일본 治者들의 멘탈리티(心性)에 서식하고 있는 확장주의적 잠재의식이 우리 이웃에게는 더 큰 문제다. 우리의 당장의 문제는 전대미문의 공산주의 세습 독재체제와의 대결·극복(통일)이다. 이 체제



이도형

·분회 상임역
·한국논단 발행인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출동언급

임진왜란 상기시켜

美國과는 동맹유지

中·日과는

不可近 不可遠

지켜나가야

가 소멸될 때까지 우리는 미국과의 공조를 절대필요로 하며, 똑같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권에 있는 일본과 긴밀한 제휴도 필요로 한다. 다만 우리에게도 아직도 군사적, 경제적으로 강대국인 일본 또는 중국의 ‘자위권’ 발동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전쟁을 먼저 도발하는 나라치고 ‘자위를 위한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는 자는 없다. 6·25를 일으킨 북한이 그랬고, 진주만을 기습한 일본도, 체코를 침공한 독일도, 독소전쟁 때의 소련도 다 그랬다. 지금 일본인들은 언필칭 戰後를 청산하고 독립된 일본으로서 다른 나라나 똑같은 보통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일종의 국민적 총의를 형성해 가고 있다.

中 위협받는 국가들 日本지지

문제는 우리 쪽에 있다. 일본의 그런 움직임에 무턱대고 반대만 할 것인가? 아니면 공동보조를 취해야 하나?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위협 아래 놓인 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일본의 국군창설, 군비확대를 공식·비공식적으로 지지찬동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그들이다.

일본은 이 물결을 교묘히 타고 있다. 2차 대전 당시 일본은 아시아를 침략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백인들의 식민지 질곡으로부터 아시아 각국을 해방시켰다고 선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등을 영국으로부터, 베트남을 프랑스로부터, 인도네시아를 네덜란드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것이다. 일본은 다시금 이들을 교묘히 활용해서 중국을 포위공략하려 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은 미묘해지고 있다.

일본은 우방이요, 우리와 함께 미국과는 군사동맹관계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중국과 ‘전략적 동반관계’라고 했다. 한일관계는 수교 50년을 앞두고 악화일로다. 한국의 언론은 일본이 ‘우경화’ 된다고 하는데 이걸 일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소리다. 수백 년 지속된 봉건제도하에서 정치·사회적 안정을 유지해온 일본의 기존체제(Establishment)는 원래 급진적 변화를 거부하는 보수지향이다. 이에 비해 오랜 왕정의 질곡과 이에 반발하는 잦은 민란, 식민지배, 권력의 중앙 집중으로 말미암은 민중과의 갈등으로 항시 불안한 한국의 급진적, 진보적 성향과는 다르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좌경화되고 있다고 해야 될지도 모른다. 보수우익을 좋지 않은 개념으로 악용하는 좌익들의 ‘일본우경화’론은 한 일양국관계를 멀리 분리시키는 효과를 빚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통일 후 까지도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고 일·중과는 경우에 따라 협조 또는 제휴하되 두 나라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不可近 · 不可遠의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秦나라가 遠交近攻策으로 六國을 평정 한데서 교훈을 살려야 한다. [4]

언론가 소식

뉴시스 사장 안중관씨 선임



뉴시스는 지난 6월 17일 안중관 부사장(사진)을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안 사장은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한국일보 제작국장, 뉴시스 감사를 지냈다.

머니투데이 사장 이백규씨 선임



이백규 머니투데이 부사장(53·사진)이 23일 머니투데이 사장(편집인 겸임)으로 선임됐다. 신임 이 사장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서강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한국일보기자, 신한종합연구소 연구원, 머니투데이 편집국장을 지냈다.

한국기자협회 제2회 세계기자대회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률)는 지난 6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회 세계기자대회(World Journalists Conference)를 갖고 ‘남북한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는 거스를 수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계기자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세계기자대회에는 전세계 50개국에서 온 기자 75명과 국내 외신기자 한국기자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일보 견습 29기 40돌기념모임



한국일보와 자매지인 서울경제신문, 코리아타임스 등의 견습 29기모임인 ‘이구회’는 지난 6월 2일 오후 6시 30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 16층 뱅키 클럽에서 ‘한국일보 견습 29기 언론계 40년 기념모임’을 가졌다. <사진>

6·25참전 언론인 - 종군기자 현창

대한언론인회-국방부 공동주관 프레스센터에 헌액

대한언론인회는 6월 30일 6·25 참전 언론인(34명) 및 종군기자(43명) 77명의 이름을 새긴 명패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 현창했다.

대한언론인회는 이날 프레스센터 19층 매화 홀에서 국방부 후원으로 대형 명패 증정식을 갖고 프레스클럽 입구에 영구 헌액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방부 관계자와 대한언론인회 임원 및 6·25 참전언론인, 언론·사회단체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김은구 대한언론인회 회장 공동명의로 된 6·25 참전언론인 명패에는 “위국헌신의 정신으로 6·25 전쟁에 참전 및 종군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고 선진 조국 건설의 토대를 마련한 6·25 참전언론인들의 빛나는 공헌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이날 참석한 6·25 참전언론인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축사(김민석 대변인 대독)를 통해 “오늘 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행복은 결국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셨던 참전언론인들을 비롯한 6·25 참전용사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것”이라며 “이 행사를 계기로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분야에 확산되고 참전용사 여러분에 대한 존경과 가족들에 대한 예우가 생활 속에서 우리나라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언론인회는 이날 헌액된 명패를 축소 제작하여 6·25참전언론인 및 종군기자에게 증정했다. [4]

6·25 참전언론인(괄호안 전직)

- 공대식(MBC 해설위원)
- 김관태(한국일보 사회부기자)
- 김성환(고바우 만화가, 동아일보 국장대우편집위원)
- 김용수(UPI통신 서울지국장)
- 김윤덕(연합신문기자)
- 김준하(강원일보 사장)
- 김 집(동양방송 사회부장)
- 김춘빈 (대한일보 정치부장)
- 김한길(영남일보 정치부장)
- 문준철(내외경제 편집국장)
- 박기병(강원민방 사장)
- 박용윤(동아일보 출판국장대우)
- 송두빈(내외경제 편집국장)
- 신현구(한국일보 편집부장)
- 안광식(한국언론학회 회장)
- 안현태(KBS 순천방송국장)
- 오판룡(영남일보 전무이사)
- 유승택(신아일보 편집국장)
- 윤양중(동아일보 논설위원)
- 이경남(현대경제, 별세)
- 이구열(대한일보 문화부장)
- 이도형(조선일보 논설위원)
- 이세환(한국경제 편집부국장)
- 이순기(서울신문 편집부국장)
- 이종기(서울신문 편집위원)
- 이종식(연합통신 전무이사)
- 임인흠(세계통신 편집국장)
- 정연복(중앙일보 사회부장)



본회 회우들이 프레스센터 19층 프레스홀에 6·25참전 및 종군언론인 명판을 헌액한 뒤 박수를 치고있다. <이철영 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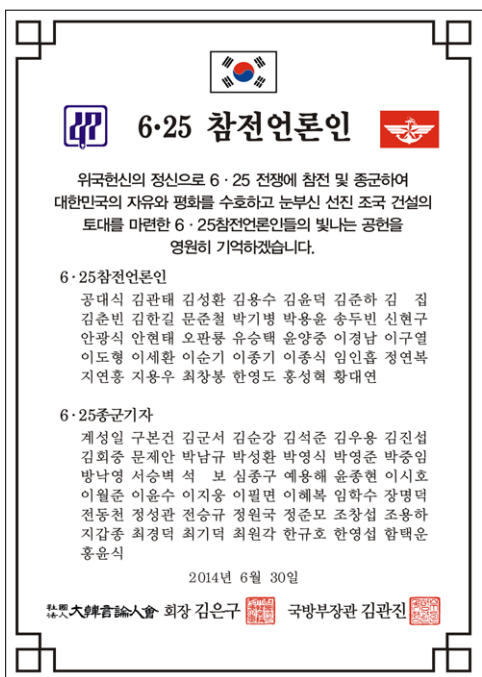
김은구 회장등이 6·25참전언론인 명패를 들고있다. (왼쪽부터 김은구회장, 김민석 국방부대변인, 박기병 6·25참전언론인 회장, 한영섭종군기자동우회 회장)



인사말하는 김은구 회장.



장관치사를 대독하는 김민석 대변인.



프레스센터 19층에 헌액된 명패.

- 지연흥(자유신문 기자)
- 지용우(경향신문 논설실장)
- 최창봉(MBC 사장)
- 한영도(미 CBS 서울지국장)

- 홍성혁(동아일보 편집부국장)
- 황대연(대구매일 편집위원)

6·25종군기자(괄호안 당시 소속사)

- 계성일(대한일보)
- 구본건(합동통신)
- 김군서(자유신문, 별세)
- 김순강(국도신문)
- 김석준(국제신문)
- 김우룡(서울신문, 별세)
- 김진섭(동아일보)
- 김희중(시사통신 별세)
- 문제안(국도신문, 별세)
- 박남규(합동통신, 별세)
- 박성환(경향신문, 별세)
- 박영식(시사통신)
- 박영준(합동통신, 별세)
- 박중임(중앙일보, 별세)
- 방낙영(조선일보, 별세)
- 서승벽(자유신문, 별세)
- 석 보(평화신문, 별세)
- 심종구(평화신문, 별세)
- 예용해(한국일보, 별세)
- 윤종현(한국일보)
- 이시호(경향신문, 별세)

- 이월준(합동통신, 별세)
- 이윤수(전북일보, 별세)
- 이지웅(동양통신)
- 이필면(대한통신, 별세)
- 이해복(자유신문, 별세)
- 임학수(동아일보)
- 장명덕(합동통신, 별세)
- 전동천(조선일보, 별세)
- 정성관(평화신문, 별세)
- 전승규(자유신문, 별세)
- 정원국(서울신문, 재 캐나다)
- 정준모(국도신문)
- 조창섭(시사통신, 별세)
- 조용하(경향신문, 별세)
- 지갑중(로이터통신)
- 최경덕(동아일보, 별세)
- 최기덕(합동통신, 별세)
- 최원각(동아일보)
- 한규호(서울신문, 순직)
- 한영섭(KBS)
- 함택운(동양통신, 별세)
- 홍윤식(합동통신, 별세)

전교조 理念지향교육 차단 할때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반정우)가 6월 19일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의 규약이 법에 어긋난다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노조’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김대중정부가 합법화한 전교조가 15년 만에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상실한 ‘법외노조’가 되면서 단체협약교섭권 등의 권리와 교육부 지원 등을 잃게 됐다. 법원은 김대중 정부가 전교조를 합법화할 때 전교조가 해직 교원도 노조에 가입 할 수 있게 한 전교조 규정을 뺀 허위 규약을 제출했었다고 밝히고 1999년 합법화 당시부터 합법 노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규약 시정 명령은 정당하다”는 2012년 대법원 판결에 이어 행정법원의 법외노조 판결로 15년간 지속된 정부와 전교조의 불법동거는 이제 끝났다.

전교조성향 교육감 공교육 훼손우려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 복귀, 단체교섭 중단, 위원회 참여 금지,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 5가지 후속 조치를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전교조의 이념지향파행 교육을 청산하고 교육을 정상화하는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6·19 ‘법외노조’ 판결은 17개 시도중 13 곳에서 전교조 성향 교육감 후보자가 대거 당선되었던 6·4선거의 대반전이다. 전교조 성향 교육감 당선자 지지율은 30%대였으나 8명이 전교조 도지부장 등 골수 전교조 출신이고, 그 중 7명은 해직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교육계는 이들이 주도할 공교육 변혁을 크게 우려한다.

전교조가 지지한 교육감 당선자들은 당선 사흘만에 대전에서 모임을 갖고 지난달 12일 공동기자 회견에 이어 16일 전교조 법적 지위 유지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공동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으로 우려했던 교육의 정치화가 현실로 나타났다.

이들이 공약한 정책중 주목되는 것은 법외노조 지원, 학생인권조례 실천, 평준화 확대, 인정 역사교과서 보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다. 전교조 성향 교육감들이 역점을 두는 학생인권조례는 체벌 및 소지품 검사 금지, 두발 및 복장 자유화, 집회 자유화, 임신 출산 등에 의한 차별 금지 등 파격적인 지침으로 2010년 시행 1년 만에 학원 폭력과 교권 침해 사태 폭증으로 공교육을 붕괴시키는 부작용을 노정했다. 교권 침해 사례가 2009년 1,570건에서 2012년 7,900건으로 5배 증가했다. 2012년엔 ‘학원 폭력’ ‘집단 따돌림’ ‘성추행 피해’ ‘학생 자살’ 폭주 사태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까지



박석홍

·본보 편집위원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대우

‘法外노조’ 판결계기 15년간 쌓인 跋行청산

좌파교육감들
‘학생인권조례’
추진 못하게
학부모들이
감시 나서야

해야 했다.

학교가 ‘학생수용소’로 전락

학생인권조례 시행후 일부 학교는 교육을 포기한 학생 수용소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학원 폭력을 경찰이 전담 해야 하는 최악의 사태까지 일어났다. 학생 감독권을 빼앗긴 교사들은 비행 학생을 ‘못 본 척 하고’, 약한 학생의 호소는 ‘못 들은 척 하고’, 학교 폭력 사건도 ‘모른 척 한다’며 피해 학부모들은 교육을 포기한 교사들을 원망했다. 학생인권조례 시행후 해마다 명예퇴직 지원교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학부모들은 참 스승을 찾기 어렵다고 공교육을 비판했다. 교육 평준화 적폐에 전교조 교육감이 도입한 학생인권조례 부작용까지 겹쳐 공부는 학원에서 하는 것으로 인식돼 교사의 영향력이 약화돼 교사 스스로 학생 선도를 포기한 결과다.

학생인권조례의 역기능과 교권추락이 사회문제로 부상했으나 전교조 성향 교육감 당선자들은 “학생인권조례는 시대정신”이라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7월 1일 출범한 전교조성향 교육감체제는 고교평준화에 이어 대학 평준화도 거론하고 전교조 사관 확산을 다짐하고 있다. 2003년 조합원이 10만명을 육박했던 전교조는 지난해 5만 9,000여명으로 축소됐으나 아직도 정치적 영향력은 대단하다. 이라크파병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광우병 촛불집회 등 반정부 시위에는 전교조 조합원들이 꼭 참여했다. 6·4 지방선거를 통해 전교조 교육감시대를 연 것도 전교조의 힘이다. 특히 전교조의 상징인 전교조 사관은,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했으며 전교조 사관에 의한 왜곡된 이념교육의 역기능이 지금 사법 언론 정치 각 분야에서 표출되고 있다. 일부 전교조 교사들은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들을 참여시켜 반란 세력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게하며 대한민국 건국 및 산업화 추진 세력과 미국에 대해서는 증오하고 평가절하하는 역사 교육을 하고 있다.

빨치산까지 찬양하는 전교조 교육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학부모들이 전교조 교육감시대 교육을 잘 감시해야 할 것이다. 제3공화국 민관식 전 문교장관의 고교평준화는 한국교육의 재앙이었다. 고교평준화와 전교조 이념 교육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임기응변하지 말고 교육문제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 교육부 직제, 교사양성 제도, 교육자치제 등 교육행정을 전면 쇄신하는 본격적인 교육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교육을 바로 잡기 위해 교육부조리의 온상인 교육 마피아 척결부터 서둘러야 한다. [4]

다시 택배일을 시작하며

구의원선거 낙선 後記

김윤재 (본회 회우·전 세계일보 수석논설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십시오.” 낙선자에게는 가장 위로 되는 말이다.

선거의 승패는 한마디로 돈과 조직의 힘이라는 점을 절감했다. 정당조직이 선거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돈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경험했다. 이제 나는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지난 해 경험했던 택배 일을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그리고 남은 인생은 돈 없는 노인들을 위해 지난 3년 동안 일해 왔던 이 발 봉사를 계속하고자 한다.

2014년 6·4 지방선거판에 출마한 까닭은 “노인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 어느 후배는 “선배님! 만약 출마하셨다가 낙선한다면, 그 후유증을 어떻게 이겨내려고 그러십니까?”라면서 간곡히 만류했다. 나는 그런 말을 듣고도 한쪽 귀로 흘려버렸다.

그 후부터 나는 초 중 고 대학 친구들이나 선배 언

론인들을 만날 때마다 ‘구의원 후보’로 출마한다는 결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힘차게 말로 전파하기 시작했다. 이유는 출마의지를 꺾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거듭 거듭 다짐한 것이다. 선배 언론인들은 “용기가 대단하다”고 격려해 주었다.

아내는 극구 만류

나의 말을 듣던 아내는 “내가 짐을 싸서 나가야겠다.”면서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돈도 없으면서 출마했다가 “집 한 채 있는 것 마저 날려버리려고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서 나의 기를 꺾어 놓곤 했다.

그러나 세월은 흘러 2014년 3월 22일 첫 등록일이 되자마자 나는 1차으로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구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때서야 아내는 못이기는 척하면서 새마을금고에 저축한 아랫집 전세금 1천만원을 담보로 8백만원을 빌려서 선거자금으로 쓰



택배에 나선 필자.

11면으로 이어집니다.

통진당 ‘國庫노락질’ 막아야 한다

“극심한 종북 공세와 사상 초유의 강제해산 시도 속에서 선거를 치렀다”(6월 5일).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와 국민 주권의 민주주의는 박근혜 독재정권과 독재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불의한 정치 판사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6월 12일).

통합진보당이 6월 초중순에 1주일 간격으로 내놓은 격정적 논평이다. 박정부는 물론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에 대한 적개심이 넘쳐난다.

민의를 심판 먼저 받아

현재 심판에 앞서 민의의 심판을 먼저 받았다. 소속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현재의 정당해산 심판을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그에 맞서 6·4 선거에 역대 지방선거 중 최다 511명의 후보를 냈었다. 그러나 냉랭한 민심만 확인했을 뿐이다. 그래도 5일 공식 논평은 종북 공세나 현재 심리가 없었었다라면 이기기라도 했으리라는 허장성세였다.

12일 대법원3부는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장을 최루탄으로 테러한 김선동 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그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국회 의석이 5석으로 더 줄어든 그날의 규탄 대상도 물론 박정부와 사법부였다. 대변인실이 나서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를, 통합진보당과 저 김선동에게 부여한 국회의원직을 박근혜 독재정권과 불의한 정치 판사들이 찬탈했다”는 ‘김 의원의 마지막 한마디’를 소개했다.

이런 식의 통진당에 대해 여론의 정죄가 본격화하고 있다. 6·4 표심만 해도 그렇다. 511명 후보 가운데 당선자는 기초의원 31명, 광역 및 기초의원 비례대표 각각 3명, 도합 37명에 그쳤다. 광역 기초단체장과 광역의회 그 어디서도 단 1명 당선시키지 못했다. 그나마 민주노동당 간판으로 나선 2010년 지방선거 땀 야권 연대의 반사적 이익으로 기초단체장 3명을 비롯, 광역의원 24명, 기초의원 115명 등 142명을 배출했었다. 민심의 4년 낙폭이 가위 ‘버티컬’이다.

민심 외면 국회는 방관만

이렇듯 돌아서는 민심과는 달리 국회는 여전히 통진당을 감싸돈다. 김선동 사례만 해도 통진당과 내연관계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 새누리당 또한 최루탄 테러를 내내 방관하 기만 했다. 자격심사, 징계 등을 통한 자정에 나서건커녕 검찰 고발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시민단체 고발로 형사사건화하고 30개월 이상 기다려 그나마 의원직 박탈로 응징할 수 있었다. 헌법의 설계대로라면 국회가 제86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자격심사 내지 징계에 나서니 검찰도 법원도 다들 물러서 있으라고 선을 그었어야 했다. 권력분립의 대의에 비춰서도 의당 그랬어야 했다. 그러나 국회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다. 대법원 확정심에 앞서 1월27일 서울고법이 1심 의원직상실형을 유지하자 통진당이 당시 홍성규 대변인의 이름으로 “김 의원은 제19대 총선에서 지역민의

특별기고



홍정기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치자금법 허점 이용

6·4지방선거 보조금

32억이상 챙겨

정당해산 심판도

현재서 미적

법정시한 안지켜

압도적인 지지로 다시 당선됐다, 우리 국민은 (최루탄을) ‘폭력’이 아니라 ‘의로운 항거’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변할 수 있었던 것도 그 근원을 파고들면 국회가 그의 의원직도, 그 자격도 문제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국회이니, 지난해 3월 22일과 9월 6일 각각 제출된 같은 당 이석기 의원 자격심사안과 징계안에 그 무슨 진전이 있을 리 없다. 법치 조롱을 방치, 아니 사실상 방조하는 그곳이 과연 입법부 국회인가 싶다. 정정당당한 입법부라면 현재가 위헌 여부를 재판 중인 정당이 6·4 선거 후보를 내 세워 선거보조금 28억 원과 여성후보 추천 보조금 4억8000여만 원 등 32억 원 이상의 국고를 지원받고 그 각각의 후보자가 적당히들 알아서 사퇴해 ‘내연 정당’을 도울 수 있게 하는 정치자금법의 허점을 저리 오래 방치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근래 들어 ‘먹튀 방지법’으로 고쳐 부르지만 2012년 대선 당시 후보로 나섰다가 막판에 물러선 이정희 대표의 ‘국고 노락질’을 잊지 않기 위해 ‘이정희 방지법’이 처음 발의된 게 지난해 1월 30일, 의안번호는 1903460이었다. 그 후 유사 법안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그 첫 법안조차 지난해 2월 7일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상정 이후 멈춰 1년4개월여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올해안에 결론낼수 있을지

현재라도 서슬차다면 흑 모를 일이다.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5일 접수시킨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는 속도감부터 다르다. 탄핵사건은 그 해 3월 12일 접수돼 5월 14일 기각까지 2개월 2일 걸렸었다. 그 페이스를 통진당 해산 심판에 대입하면 현재는 1월 7일까진 결판 내려야 했다. 하지만 바로 그날 1월 7일 통진당은 현재법 제40조 민사소송규정 준용과 제57조와 관련한 가처분의 위헌을 구하는 별개 헌법소원 2건을 제기한 날로 기억될 뿐이다. 그 2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현재는 2월 27일 모두 기각했다.

현재법 제38조는 심판기간을 18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법정 180일을 꼭 채우는 날이 지난 5월 14일이었다. 아무리 훈시규정이지만 하다못해 함께 청구된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도 그 시한을 지켰더라면 먹튀 논란이 두고두고 현재진행형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현재가 그런 기대를 접게 한 지 이미 오래다. 지금 페이스라면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태풍이 열대성저기압으로 세가 약해진 뒤 소멸하듯 통진당도 흑 하늘 아래 민심이 그렇게 만들지 모른다는 식이지 않을까, 이런 의심까지 점점 부풀고 있다는 점을 현재가 더 흘러들진 않기 바란다.

이렇듯 국회에서도 현재에서도 정의의 실현이 하루하루 지체되면서 ‘지연된 정의는 부인된 정의, 곧 불의’라는 법언의 적실성마저 점점 의심스러워질 판이다. 국회 그리고 현재가 더 정의로워야 할 것이다. 그것도 돌이킬 수도 없을 만큼 늦기 전이라야 한다. ☞

10면에서 이어집니다.

라면서 통장을 내밀었다.

“더 이상 돈은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참으로 나는 용기백배했다. 이제 자신있게 선거에 임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71세의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워 보였다. 그동안 아내에게 지은 온갖 죄들이 뇌리에 떠올랐다. 지금도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나는 저금한 돈이 한 푼도 없었지만 아내도 따로 저금한 돈이 한 푼도 없다는 사실을 후보등록 때 재산 신고를 하면서 확인했다.

돈과 정당 조직이 승패 좌우

선관위에 등록했으니 이름을 알리는 것이 급선무였다. 언론사 논설위원과 국장을 지냈다고는 하지만, 지역에서는 무명 인사였다. 나를 아는 사람은 우리 지역에서 거의 없었다. 동네에 다니면서 나이 드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다 보니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지금까

지 본 적이 없다.”면서 동네를 위해 일한 적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투로 이야기했다. 정말 맞는 말이었다. 내가 동네를 위해 청소를 해 본 적도 없고, 동네 사람들에게 무엇을 베푼 적은 더구나 없기 때문이다.

우선 명함 돌리기에 나섰다. 흔히 서울의 후보자들이 하는 것처럼 전철을 타려는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명함을 뿌렸다.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필요 없어요.” 하는 사람도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명함 받는 것이 싫어서 길을 비켜가기도 했다. 젊은이들 가운데는 받은 명함을 바로 땅에 내동댕이치는 경우도 있었다. 지하철 입구에는 명함이 수북이 쌓이기도 했다. 지하철역 입구에서 명함을 돌리면서 마치 “바다에 돌을 던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4일 동안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2,000장을 뿌렸다. 그것이 허공으로 날아갔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가게에 명함을 내밀면서 “기자 40년” “인생 70”이라고 말하고는 오승근 가수의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인데!” 하는 말을 살짝 바꾸어서 “내 나이가 어때서 봉사하기 딱 좋은 나이 인데!” 하

고 큰 소리로 이야기 하면, 특히 여성들이 환하게 웃어 주었다. 그리고 남자 노인들도 “그럼! 그렇고 말고!” 하면서 맞장구를 쳐주었다.

그 다음에는 각 동마다에서 가장 맛있는 집 몇 곳을 골랐다. 한 집에 평균 10회 이상 연속으로 찾아갔다. 주인과 친하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음식점을 찾은 손님과도 자연스럽게 아는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하여 주민들과 친숙도를 높여갔다.

그러나 그런 것은 그야말로 보리밭의 이삭줍기와 다름없었다. 사실 하루 종일 보리밭을 누벼도 한 되 줍기조차 힘들다. 각 동에는 공식으로 20개가 넘는 각종 단체가 버티고 있었고, 동마다 비공식 친목 모임은 수백개에 달했다.

그 모든 모임은 기존 정당들과 연관을 맺고 있어서 짧은 시간에 조직을 파고들기가 무척 힘들었다. 특히 정당투표가 대세였고, 나 같은 무소속은 전혀 관심의 대상이 못됐다. 결과는 좌절이었다. 아직 후유증은 남아 있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다. ☞

인생 2막

심상기 서울미디어그룹 회장

·전 중앙일보 상무 ·전 경향신문

인터뷰 : 글·사진 이규섭 (본보 편집위원·칼럼니스트)

문화산업 비즈니스 리더 ...신문·잡지등 1

‘뛰며 넘어지며’ 50여년을 언론현장에 몸담고 있는 그는 바람꽃을 닮았다. 희끗희끗한 잔설을 헤치고 꽃샘바람에 맞서며 피는 꽃이다. 끈질긴 생명력으로 바위틈에 뿌리를 내리듯 척박한 언론풍토에서 언론문화의 꽃을 피웠다. 그 주인공은 沈相基 본회 전문위원. 업무를 따지면 ‘인생 2막’이 아니라 ‘인생 1막’의 연장이다.

그는 1936년 충청남도 부여에서 태어나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61년 경향신문 견습 3기로 입사하여 사회부·정치부 기자를 거쳤다. 1965년 중앙일보 창간멤버로 스카우트 되어 정치부장·편집국장·출판담당 상무를 지냈다. 1990년 친정인 경향신문 사장을 역임하였다. 대통령 표창(2001년)과 화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여기까지가 ‘인생 1막’의 주요 경력이다.

척박한 땅에 꽃피운 ‘언론문화’

중앙일보 출판담당 상무를 끝으로 신문사를 나와 ‘인생 2막’을 연 것은 순 세 살. 사업을 시작하기엔 늦은 나이이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도전장을 던졌다. “퇴직금 날리고 길바닥에 나왔으려하느냐”고 주변에선 만류했다.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다. 정동 신아일보빌딩에 사무실을 내고 승부수가 빠른 여성지 창간을 준비했다.

‘센스 있는 여성, 젊게 사는 주부’를 캐치프레이즈로 ‘우먼센스’가 1988년 8월 고고의 성을 올렸다. 예상을 뛰어넘는 대박이었다. 초판 5만 부가 말 그대로 하루 만에 동났다. 전화통에 불이 났다. 4쇄까지 12만부 가깝게 찍었다. 국내 잡지사상 창간호 초판 4쇄는 신기록이다. 판형을 키우고 지면 대부분을 컬러로 제작했고, 특종기사가 주효했다. 이병철 삼성그룹회장이 일본에서 얻은 아들 풀 스토리, 가수 조용필 아내 박지숙의 ‘그의 빛나는 갈채 뒤에 나는 버려진 여자였다’는 고백 등 눈길 끄는 기사가 많았다.

여세를 몰아 여성생활지 ‘리빙센스’, 요리전문지 ‘에센’, 육아지 ‘베스트 베이비’, 남성패션 전문지 ‘아레나’, 주간 ‘일요신문’ ‘시사저널’, 초·중·고교생 만화잡지 ‘아이큐 점프’, 초·중등 여학생만화잡지 ‘밍크’, 10~20대 여성을 겨냥한 순정만화잡지 ‘윙크’ 등을 잇달아 창간했다. 최근 학습만화 잡지 ‘보물섬’과 국내 최초 격주간 패션잡지 ‘그라치아’를 창간, ‘인생 2막’ 무대를 다채롭고 화려하게 펼쳤다. 이밖에도 한자, 수학 등 학습 잡지를 격월로 내고 있다.

“성공비결은 긍정적 사고”

문화산업의 비즈니스 리더로 우뚝 선 심상기 서울미디어그룹 회장을 지난달 13일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서울문화사 사옥에서 만났다. 5층 건물에 회장실은 4층. 선비풍의 잔잔한 미소로 반갑게 맞이한다. 서가엔 주요 자료집과 각종 상패가 빼곡하게 진열돼 있다. 책상 뒤편엔 고향의 상징인 부여 낙화



10여개의 매체를 거느린 심상기 서울미디어그룹 회장은 “아직도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고 한다.

중앙일보 출판담당상무로 퇴직후 여성 월간지 창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 300여종사자

암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그린 동양화가 걸렸다.

“매일 4층 계단을 오르내려 운동되지 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하루 몇 번씩 오르내리니 다리 근육에 도움이 되겠조. 걷는 게 운동입니다. 매일 저녁 8시 이후엔 1시간씩 걷습니다. 젊었을때부터 등산을 좋아했조. 골프도 더러 치고 헬스클럽에도 다녀 운동은 많이 하는 편이죠, 50년 넘게 활자를 다루며 스트레스를 받은 탓인지 소화기능이 약한 편입니다.” 매주 발행하는 사내보 ‘용마루’의 깨알 같은 활자도 읽는다. 백내장 수술 후 시력이 좋아 졌다고 한다.

-자회사 5곳과 10여 개의 매체를 관리하시려면 바쁘시겠습니까.

“서울미디어그룹의 모든 매체는 책임경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아침 일요신문, 시사저널 편집회의를 주재하고, 수요일엔 자회사

CEO와 이사, 본부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하죠. 매체별로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가 워낙 많아 구두 보고만 받습니다.” 북아현동 단독주택에서 40여 년째 산다는 심 회장은 아침 6시에 기상하여 조간신문을 체크한 뒤 7시 30분 경 아침을 꼭 챙겨 먹고 9시에 출근한다는 것. 오후에는 필요한 현안을 챙기거나 외출하여 지인들을 만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주로 나눈다고 한다.

-활자신문이 사양화되고 출판 업계의 장기 불황이 이어지는 데, 성공 비결은?

“국내 출판업계가 유례없는 불황을 맞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KPIPA)’의 ‘출판산업 동향’을 보니 지난해 신간 발행 종수는 전년대비 5,200여종(7.9%) 줄었다고 합니다. 출판사 10곳 중 6곳은 5종 이하로 발행하여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지요. 저희도 몇 개 매체는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며 성장세



서울문화사의 만화잡지 ‘아이큐 점프’

를 견지하고 있지만 겨우 현상 유지하거나 적자를 내는 매체도 있습니다. 성공 비결이란 게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

사장

다시 된다

4

10여매체 운영



고 오랜 기간의 기자생활, 중앙일보 출판담당 상무, 경향신문 사장 등을 맡으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 성공 지향적인 사고로 열심히 일한 덕분이죠.”

그가 출판 상무로 재직하면서 거둔 첫 번째 성과는 ‘여성중앙’. 판매부수와 광고매출을 크게 올려 경쟁자를 따돌리고 1등의 자리를 꿰찬 것이다. 화제거리를 발굴하고 편집방향을 결정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월간 ‘음악세계’, 무크지 ‘아름다운 집’, 청소년 잡지 ‘하이틴’을 창간하고 단행본을 잇달아 출간하여 출판국 전성시대를 열었다. 특히 만화가 본격적으로 대접받는 시대가 올 것을 예단하고 만화잡지를 추진했으나 사내 반발로 무산됐다. 그 꿈은 서울문화사에서 성과를 거둬 예측은 적중했다. 만화 붐을 일으키면서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

대사의 물줄기였다는 생각이 들어 기록으로 남겼어요. 언론인이자 기업인으로 뛰다가 넘어지는 좌절도 겪었지만 끊임 없이 생각하고 노력하고 시도함으로써 지금에 이르렀다는 사실만큼은 내세우고 싶습니다.”

외유내강형 충청도 신사

저서에는 경향신문 사회부 기자 시절의 특종기, 1971년 12월 비상사태 선포 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결 현장의 증인으로 호출된 사연, 1972년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방북 사실을 알고 기사화하려다 중앙정보부 취조실로 연행되어 고문이 짙어지는 고문을 당한 내막, ‘시사저널’과 ‘일요신문’을 발행하며 당해야 했던 시련과 고통도 고스란히 담아냈다. 특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인 그가 ‘교사모(교회를 사랑하는 모임)’를 결성하여 교회의 불투명한 재정운영과 담임목사의 족벌체제 운영의 문제점을 제기해 출교당하는 수모를 겪었다가 복교당한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다. 중앙일보 편집국장 시절, 신군부에 의한 언론계 숙청, 한수산의 연재소설 ‘육망의 계절’ 필화사건으로 작가는 물론 업무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편집국 간부와 기자들이 악명 높은 ‘빙고 하우스’인 보안사 조사실서 곤욕을 치른 기록 등을 생생하게 담았다.

최학래 전 한겨레신문 사장은 ‘심 회장처럼 언론계의 노련자위는 다 거친 팔십 줄 노인이 아직도 50년 현역이라면, 그 미소와 싸움기질, 겉으로 웃으며 속으로 창끝을 베풀리는 자질이 그 지속의 밑천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며 추천 글에서 밝혔다. 김학준 전 동아일보 사장은 ‘외유내강형 충청도 신사의 올곧은 언론활동 반세기’라고 평가했다.

“이루고 싶은 꿈★이 남았다”

-기자과 CEO의 차이는?

“기자는 취재와 글쓰기가 주요 업무지만, 경영자는 무한책임을 져야 하니까 하늘과 땅 차이지요. 특히 언론과 출판 사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가 아닙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안목, 추진력, 돌파력, 자금력 등 역량을 고루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울미디어그룹 종사자는 3백여 명으로 인건비도 만만찮다. 그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듯 무리는 하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신문사 월급쟁이 시절에는 세금문제 이야기가 나오면 근로소득세정도가 관심사항이었지요. CEO로 사업을 하다 보니 세무조사나 추정금 등이 현실문제로 다가오더라”고 부연한다. 그는 회사 창립 15년 동안 내부자금을 더 만들려고 배당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한 인터넷 매체가 엄청난 배당을 받은 것처럼 보도하여 울분을 참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명예훼손 소송을 준비했다가 정정·삭제 보도를 받아들여 소송을 포기한 적도 있다며 경영인의 어려움을 털어 놓는다.

-경영철학은?

고령자의 건강 리포트 ㉨

불필요한 검사 피해 막아야



이광영

- 본회 논설위원
-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
- 한국 골든에이지포럼 상임이사

최근 미국에서 의사들이 불필요한 검사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끈다. ‘선택을 현명하게’(choosing wisely)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미국내과위원회(A B I M : American Board of Internal Medicine)재단이 미국 의사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대부분이 너무 많은 검사처방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중의 절반은 이 같은 현상이 환자의 요구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로버트 우드 존슨재단(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 지원을 받아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의사의 3분의 2가 불필요한 검사실태가 심각하다면서 쓸데없는 검사나 처치를 받지 않도록 의사가 역할과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고 15%는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반응했다. 조사에 응한 의사의 72%가 일주일에 한번 꼴로 불필요한 검사나 처치를 한다고 답했고 환자가 불필요한 검사를 요구할 때 이유를 설명해주면 수긍한다고 했다. 그러나 53%의 의사는 환자가 계속 요구하는 경우 불필요한 검사와 처치를 해 준다고 했다.

ABIM재단 회장 리처드 바론(Richard Baron)박사는 이번 연구에서 미국 의사들은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바론 박사는 불필요한 검사를 피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며 불필요한 검사가 종종 환자에게 해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 의료비 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ABIM재단은 의사와 환자는 불필

요한 검사나 처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로버트 우드 존슨재단 수석 부회장 존 룬킨(John Lumpkin) 박사는 점점 많은 의사들이 불필요한 검사나 처치를 하지 않을 책임이 의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의사와 환자 간에 어떤 검사가 필요하고 어떤 검사가 불필요한 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문제를 쟁점(issue)화 함으로써 어떤 검사가 필요하고 불필요한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현 미국 의료문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데 중요하다고 연구자는 말했다.

한편 학술지 ‘손상예방’(Injury Prevention)은 최근 고령자 5명 중 1명이 자신의 질병과 관계없이 병원 진료과정에서 손상을 입고 있다는 미국 메릴랜드 주 토슨대(Towson University) 노인학 프로그램 책임자인 카터(Mary Carter) 교수의 연구결과를 게재했다. [4]

간으로 대박 거느린 CEO



편집실.

선페스티벌(SICAF) 조직위원장까지 맡게 됐다.

최종률 전 중앙일보 주필은 “심 회장은 역설적으로 성공의 열쇠는 좌절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성공한 비결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다”고 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난해 저서전 격인 ‘뛰며 넘어지며-울창이 기자 50년 표류기’(2013년 5월 나남출판사)를 출간 하셨습니다.

“저희 세대 언론인들은 누구나 소용돌이치는 격랑의 시대를 현장에서 겪었습니다. 그 당시 취재수첩에 깨알 같이 적어놓았던 내용은 현

“언론·출판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기업은 곧 사람이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조직이 커지고 종업원들이 늘어나면 사람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 없지요. 유능한 인재를 거느릴수록 성공확률은 높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확률이 높은 거죠” 서울문화사 직원 1호로 입사한 정영애 차장은 25년이 넘는 지금도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사람을 아끼는 단면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제품의 품질관리,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새로운 정보 확보, 신용과 신뢰를 잃지 말아야 함을 신조로 삼아 경영하고 있다고 밝힌다.

-후계구도는?

“건강이 뒷받침 되는 한 움직이려고 합니다. 삼성증권에 근무하던 둘째 아들이 경영전략실장을 맡아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한언론인회 발전 방향에 대한 조언을 해주시죠.

“이익 단체가 아닌 만큼 친목도모와 동호회 활성화, 문화 활동에 힘썼으면

합니다. 공익 재단 등의 도움을 받아 해외언론사 시찰 등을 주선하는 방안도 모색해보는 게 어떨는지요”

-아직도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시사저널’이나 ‘일요신문’에서 한 발짝 더 나가 조금 더 큰 욕심을 내보고 싶습니다. 케이블 텔레비전도 운영해 보았으니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도전해 볼 의지는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회사의 내실을 다지고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 시대변화적응, 성과 지향 조직으로의 변신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의욕은 여전히 청춘이다.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언론의 기능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지만 언론의 역할은 필요하고 누군가가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한다.

“무엇 보다 내가 처음 신문기자를 시작하던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심 회장은 “비록 노병이지만 땀 흘려 일하고 노래하며, 전진하는 전선에 머물고 싶다”는 다짐이 긴 여운을 남긴다. [4]

문창극 사태 KBS보도 집중비판

안대희 총리지명예 전관예우 논란으로 날아간 뒤 헌정 사상 첫 기자 출신인 문창극 총리 카드도 야권과 KBS, 좌파 언론 매체들의 공세 속에 14일 만에 끝났다. 검증의 피로 누적으로 결국 보따리를 짊어 총리를 유임시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많은 신문들은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정상화,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제도 개선, 공정성과는 거리가 먼 KBS의 비정상적인 보도 행태 등에 개혁을 촉구했다.

최고경영자 부재의 KBS가 6월11일 9시 톱뉴스로 1시간이 넘는 문 후보의 교회 내 강연을 몇 분으로 짜깁기해 문제될 대목만 골라 보도하면서 국무총리감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어 여론조사 결과 문 후보의 총리 적합도는 단 9퍼센트까지 급락했다. 좌파는 사퇴를, 우파는 청문회 강행을 촉구하며 분열했다. ‘친일 반민족’이라는 뜻에 갇힌 문 지명자는 조부가 독립운동가로 밝혀지자 명예회복의 출구가 마련됐다고 판단한 듯 6월24일 내려갔다. 그 와중에 혼미한 정부·여당은 지명철회와 청문회 강행의 득실을 재는 자중지란으로 신문들의 비판을 받았다.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적 지지를 앞섰다. 문 후보자는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겠다고 사퇴하면서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언론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도덕적 흠결이 없자 자질 검증보다 역사관과 종교관을 묻고 늘어진 언론의 일탈 양상이었다. 동영상이나 녹취록 전체를 보면 우리 민족의 고난과 극복에 대한 지명자 나름의 철학이 드러난다. 문화일보는 24일 사설에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프레임의 하나인 친일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통보수 가치를 따르는 문 후보가 곱지 않았던 야당, 일부 매체, 일부 초선과 중진인 긴 여당까지 주로 KBS의 짜깁기 보도로 만든 여론에 기대 사퇴를 압박했다. 친박 좌장 서청원도 끼었다. 이는 보수층의 박 정부 지지 이탈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신문들 회의적 시각으로 출발

신문들은 문 지명에 회의적 시각이었다가 역사관이 불거지자 비판 양상으로, 사퇴 압박이 일자 청와대 책임론으로 바뀌었다. 동아는 ‘깜짝 발탁 문창극 후보자, 국민 기대에 맞는 총리감인

가’(사설 6/11), ‘文 총리 후보의 역사인식, 충분한 설명과 검증 필요하다’(6/13), ‘文 총리 후보에 거취 압박하는 청와대 무책임하다’(6/19), ‘문창극 딜레마… 대통령의 결단 빠를수록 좋다’(6/21)를 썼다. 조선은 6월11일 ‘언론 출신 총리, 靑朴 국정원장을 보는 기대와 우려’, 6월13일 ‘文 후보자도, 청와대도 설명할 책임 피할 수 없다’ 정도를 썼다. 문창극 공격 선봉에 선 한겨레는 ‘문 후보자는 극심한 우편향 언론인으로 평가받는다. 인선의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가’, ‘통합·책임 총리와 거리가 먼 문창극 카드’(6/11), ‘청문회 통과’만으론 청문회 통과 어렵다’(6/12), ‘총리 자격이 아니라 국민 자격이 의심스럽다’(6/13), ‘해외도피감 총리를 밀어붙이는 청와대’(6/14), ‘기독교 근본주의 총리로 통합 이룰 수 없다’(6/16), ‘6·15 선언 14돌과 북한 붕괴론자 총리 후보’(6/16) 등의 인신공격성까지 엮어오는 사설로 비판에 몰입했다. 25일에도 “그는 오직 ‘남 탓’ 하기에만 바빴다”고 공격했다. 하지만 여론으로 공직자가 진퇴를 결정해야 한다면 2013년 사회통합위 조사에서 신뢰도가 5.6퍼센트로 각종 기관 중 최악인 국회의원들은 김항식 전 총리 말대로 벌써 총사퇴했어야 했을 것이다.

‘게이트 키퍼’ 없는 KBS가 문 지명자에게 반론권도 안주고 일방적으로 짜깁기한 ‘마녀사냥식’ 보도에 많은 신문들이 비판을 가했다. 동아는 25일 ‘공영방송 KBS의 문창극 보도 언론본분 망각했다’ 사설에서 “KBS는 ‘방송 의도’에 맞는 것만 골라낸 측면이 있다. KBS 심의실에서조차 불공정한 보도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시청자

신문시평



김영환

·본보 편집위원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위원회에서도 일부 시청자위원이 ‘문창극 조작음해 보도’를 문제 삼았다”면서 “KBS는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방송과 관련해 한국언론학회로부터 ‘아무리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도 공정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 등 공정성 논란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방송통신심의위의 엄격한 심의와 KBS의 적폐를 바로 잡는 개혁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중앙은 24일 사설 ‘KBS 문창극 보도, 저널리즘 기본원칙 지켰는가’에서 “각계 인사 482명이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한 KBS 보도를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을 지난 22일 발

것은 아니다. 함부로 매도하고 낙인찍은 다음에 제 귀는 닫아버리는 풍토를 그대로 두고는 국가 개조는 공염불일 뿐이다”라고 썼다. 동아 김순덕 칼럼은 ‘광우병 선동 뺏치는 KBS 문창극 보도’에서 “노영방송으로 불리던 MBC는 뼈를 깎은 끝에 공영방송답다는 찬사를 듣게 됐다. KBS 사태는 문창극 한 개인을 넘어 나라의 명운이 달린 문제일 수 있다”고 역설했다.

“KBS 왜곡 놀라운 솜씨” 도마에

한국경제는 13일 사설 ‘문창극 발언을 어처구니없이 거두절미한 KBS’에서 “(비숍 부인이) 조선인은 아주 부지런한데 착취하는 부패 관리들 때문에 일을 하지 않게 됐다는 말을 한 것이다. 앞뒤 잘라내고 ‘조선인은 게으르다’고 말한 것처럼 편집한 것이 KBS의 놀라운 솜씨(?)다”, 아시아투데이는 23일 ‘KBS, 문창극 강연 테이프 전량 공개 방영하라’는 사설에서 “KBS는 문 후보자의 과거 교회 내 강연내용을 전량 공개 방영해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늦게라도 잘못을 인정하면 국민들의 용서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신문들은 강력한 리더십의 지휘자가 KBS 개혁에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지는 못했다.

공직후보 검증은 인사청문회에서 하지 박지원의 말처럼 ‘제2의 아베 총리’ 운운하는 가장 포악한 포퓰리즘적인 언어로 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경종도 신문들은 안 울렸다. 서울신문은 25일 사설로 “응당 자신들이 나서야할 공직 후보 검증을 여론재판으로 대신하는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언론도 건전한 담론 형성을 방해하고 사회 갈등을 부추기지는 않았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영 논리에 파묻혀 상대방 공격의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만 발췌하는 왜곡된 보도태도를 버려야 신문은 선진 언론으로 발전할 수 있다. 25일 동아일보 배인준 칼럼은 사마천의 사기를 인용하여 이렇게 썼다, “사기 ‘초원왕(楚元王) 세가’와 ‘평진후주부(平津侯主父) 열전’에 이런 말이 나온다. ‘나라가 흥하려면 상서로운 징조가 나타나는데 군자는 기용되고 소인은 쫓겨난다. 나라가 망하려면 여진 사람은 숨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난신들이 귀하의 신 몸이 된다.’ 나라가 흥할 조짐인가, 망할 조짐인가. 참 어두운 생각이 든다.”

왜곡보도 편승 歷史觀 거론하다 강연내용 알려지자 방송 맹비난

표했다. 이들은 강연의 일부만 인용해 친일·반민족으로 몰아간 것은 언론의 본분을 망각한 너무나 중대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면서 “MBC는 20일의 대담프로그램에서 문 후보자의 강연 내용을 40분간 그대로 내보냈다. 방영 이후 방송 게시판에는 다양한 관점을 지닌 의견들이 올라왔다. KBS가 이 방식으로 보도했다면 ‘마녀사냥식 인격살인’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았을 것이다.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언론기관인 KBS 보도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사회 전체가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도 25일 사설 ‘문창극 파동이 남긴 것’에서 “문 후보가 이 시기에 걸맞은 총리후보였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작지 않다”면서도 “그가 강연에서 부정적이고 수치스러운 역사를 언급한 것은 그것을 딛고 긍정적이고 자랑스러운 역사로 이어졌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언론사엔 줄이고 압축해 보도할 수 있는 편집권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비틀고 왜곡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김명수 회장 재선임



경향신문

경향신문 사우회(회장 김명수·분회회우)는 지난 6월 27일 정오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2014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현 김명수 회장의 연임을 결의했다.(사진)

사우회 소식

사우회보 26호 발행

서울신문

서울신문사우회(회장 김문진·분회 부회장)는 지난 6월 5일자로 사우회보 26호를 발행했다. 타블로이드 8면 컬러판으로 나온 이번호는 ‘신록의 5월 사우들 청계산서 산림욕 만끽’ 제하의 머리기사에 서 지난 5월 18일 과천서울대공원 산림욕장 걷기 대회 소식을 현장감 있게 실었다. 사우수첩을 5년만에 새로 제작한다는 소식과 제1회 바둑대회, 당구동호

회, 사우동정 등 다양한 기사들이 눈길을 끈다.

수락산에서 단합행사

한국경제

한경사우회(회장 엄영섭)는 지난 6월18일 경기도 양주군 수락산 기슭에서 상반기 결산 및 회원 단합행사에 회원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산행을 마치고 수락산 계곡의 한음식점에서 하반기 운영계획과 회원친목등을 다짐했다.

창간60년 기념식 개최



한국일보

한국일보사우회(회장 제재형·분회고문)는 지난 6월 9일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

15면으로 이어집니다.

왜곡... 과장... ‘제2광우병사태’ 연상

고장난 나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3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언제 이 참사 사건의 충격과 소용돌이에서 빠져 나올 수 있을지 가늠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여·야 정치권은 참사 사건의 본질과는 관계도 없는 국정조사 시기를 놓고 정치적 계산에 따라 줄다리기만 하고 있고, 세월호 참사의 주범(?) 유병언만 잡으면 이 사건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해군함정까지 동원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유병언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을지 모른다는 추측마저 나돌고 있다.

세월호 사고 초기 구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노출한 정부의 미숙한 일처리, 곳곳에서 드러난 혼선과 국가개조라는 거창한 캐치 프레이즈를 명분으로 내세운 총리 지명자의 도중하차, ‘하나님의 뜻’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문창극 총리후보자의 자진사퇴 등 지난 3개월여 동안 이 땅에서 벌어진 혼란스러운 사태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깊은 자괴감과 좌절감에 빠져있다.

외국의 한 시사주간지는 세월호 참사 사건을 두고 ‘고장난 나라-비겁한 선장, 무능한 정부, 한심한 언론’이라고 압축해 표현했다고 한다.

한심한 언론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언론의 역할과 책임이 비판의 대상이 되곤 한다. 특히 방송 매체는 동시성과 강력한 전파성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더욱 올바른 역할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목포 뒷산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등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많이 겪었다. 이번 참사사건은 과거의 사건과는 인명피해의 규모나 성격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회적 충격이 큰 사건이지만, 이런 사고때마다 방송보도가 울부짖는 유가족의 인터뷰, 스케치 기사 위주로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짜여져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 보도는 이런 낡은 보도행태를 되풀이했을 뿐아니라 보도의 기초인 확인 절차도 없이 엄청난 오보와 무책임한 말들을 열심히 퍼날라 국민들을 큰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정부의 구조활동과 방송에 대한 불

신과 분노를 일으키게 했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는 사고 당일 11시 MBC는 ‘단원고 학생 308명 전원 구조’라는 반가운 소식을 방송했고 YTN, 채널 A, SBS, MBN이 충실하게 이 오보를 중계방송했다. MBC는 20여분 후 오보임을 파악하고 정정보도했지만, 재난 방송 주관사라는 KBS는 MBC가 정정보도한 2분후에 ‘전원 구조’라는 MBC의 오보를 그대로 방송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

이 오보를 두고 어떤 SNS에는 독재정권의 홍보수법이라는 열토당토않은 글이 뜨기도 했다.

KBS, 문창극에 ‘친일·반민족’ 씌워 MBC, 강연전체 방영해 ‘眞意’ 밝혀

이런 혼란한 틈에 전문가들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다이빙 벨이라는 구조장비를 구조현장에 즉시 투입해야 한다며 법석을 떨어 한시가 급한 구조활동을 방해하고, 그것이 마치 도깨비방망이인양 떠돌아댄 정체가 의심스러운 구조전문가와 한 방송사의 전직 기자는 한 동안 구조 현장과 유가족사이를 마음대로 휘젓고 다녔다.

종편방송 JTBC와 거기에 부하노동한 각종 언론들이 다이빙 벨을 구조현장에 투입하지 않는다고 구조당국을 비난하는 인터뷰와 다이빙 벨을 찬양하는 방송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 소란은 구조의 종결자처럼 행세하다가 실종자수색은커녕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해경 구조대에 구조되는 신세가 되어 막을 내렸다.

MBN은 자칭 잠수사라는 홍가혜의 인터뷰를 통해 “해경이 민간 잠수사들에게 적당히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며 민간잠수사들의 구조활동을 막았다. 침몰 세월호에서 생존자를 봤다.”는 등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거짓말을 무책임하게 방송해 한동안 구조당국을 혼란

방 송 시 평



정창기

·본보 편집위원
·전 KBS 보도본부기획실장

스럽게 만들었다.

“거짓은 이미 대문밖으로 나갔는데, 그때서야 진실은 현관에서 신발 끈을 매고 있다.” 외국의 어느 정치가가 한 말이다. 진실이 신발을 신는 사이에 분노를 부추기는 세력과 일부 정치세력은 거짓 정보와 괴담, 무책임한 말로 당국의 구조활동에 각종 의혹과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키웠다.

뒤편썰기식 공격

6월 11일 KBS 9시 뉴스는 ‘문창극 총리후보자가 교회 강연에서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하나님의 뜻이란 취지의 발언했다.’라는 소개 멘트를 하면서

문 후보자가 기독교적 역사관에 근거한 종교적 강연을 기승전결의 문맥을 무시하고 특정 부분만 발췌, 방송해 전체 내용이 왜곡되게 시청자에게 전달되었고, 분별 없는 SNS와 야당의 정략적 뒤편썰기식 공격으로 문 후보자에게는 ‘반민족·친일’의 모자가 씌워졌다.

2008년 근거없는 각종 괴담과 왜곡, 과장, 몰아 붙이기식 보도와 선동으로 여론을 오도해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광우병사태를 연상케 했다.

지난 20일 MBC가 긴급진단 프로그램에서 문제의 43분 교회 강연 전체를 방송해서 강연 내용의 진의가 밝혀지고 문 후보자의 ‘친일·반민족’ 굴레는 벗어졌으나 왜곡된 보도로 훼손된 문창극씨의 명예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한 후보지명과 사퇴사이 14일만에 있었던 소모적 논쟁, 국정공백에 따른 국가적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총리 선임이라는 중요한 국정에 결정적 지장을 초래한 KBS는 깊은 반성과 함께 이번 왜곡 방송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할 것이다.

누구를 위한 파업인가

정권교체기나 사장교체기때마다 상습화한 방송파업이 이번에는 세월호 침몰 참사사건 와중에 불거져나온 김시곤 보도국장의 돌출 발언으로 촉발되었으나, 파업의 발전 과정을 보면 분노를 부추기는 정치세력의 개입이 사태를 악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170일간의 최장 기록을 세운 MBC 파업과 이에 동조한 KBS 제2노조의 95일간 파업의 여진이 아직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공영방송 KBS가 또 다시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주도자들이 주장하는대로 세월호 보도에서 사장의 의견제시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의 규명도 없이 길환영 사장에게 ‘보도통제’라는 울가미를 씌워 몰아내는데 성공했다.

세월호 참사사건이라는 큰 사고앞에서 이유야 어떻든 장관 청문회, 7월 재보궐선거 등 갈길이 먼 여권입장에서는 시끄러운 상황을 서둘러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조가 시끄럽게 떼를 쓰면 왜곡, 날조로 씌워진 울가미를 벗겨주려고 노력하기는커녕 그 자리를 물러나게 하는 행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해칠 뿐만아니라 공영방송 존립에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방송 길들이기 국정조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 국정조사 야당 소속 특위위원들이 KBS와 MBC에 메인 뉴스 시간대별 큐시트 및 수정내용과 일선 취재기자들의 세월호 관련 취재계획 보고내용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여기에 더해 두 방송사 사장은 물론, 본부장, 부장급 인사의 유·무선 전화 통화 내역까지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도 있다.

야당 소속 국정 조사위원이 요구하는 내용은 언론의 자유와 자율성이라는 민주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다.

방송의 독립성, 중립성에 대해 지금의 여당이 야당 시절에 했던 똑같은 주장을 이제는 야당이 하고, 여·야의 역할이 바뀌면 지난 20여년처럼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것이다. 국가 개조차원에서 여·야 정치권은 방송이 정치출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기를 기대한다. [4]

14면에서 이어집니다.

레스클럽에서 한국일보창간 60주년 기념식을 갖고 회원들의 친목을 다졌다.(사진)

이날 한국일보사우회는 ‘창간 60주년에 즈음한 우리의 결의’에서 “한국일보가 지금의 정체기를 하루속히 벗어나 한국 언론계의 선도적 위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한다면 이를 힘껏 도울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참석한 본회 회우는 다음과 같다.

제재형 고문, 흥원기 명예회장, 김경태 김두근 김승웅 김후란 나용경 남재희 박 실 박재권 봉두완 손위수 손일근 오인문 윤익한 이 형 이성춘 이순기 이역순 이정원 이태영 임흥빈 탁성만 한기호 홍순일

사우회보 146호 발행

KBS 사우회(회장 정근춘)는 지난 6월 1일자로 사우회보 146호를 발행했다. 사우회 창립 25주년 특별호로 제작된 이번호는 1

면에 KBS사우회의 어제와 오늘, 사우회 창립 특별 좌담회 소식을 비롯해, 6·7면 화보 봄철 친목활동이 돋보인다.

2014년 전반기 산행

헤럴드 사우회(회장 윤익한·본회 상담역)는 지난 5월 31일(토) 2014년도 첫 등산 모임을 4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계산에서 가졌다.(사진) 등산을 마친 헤럴드사우회(코리아헤럴드와 헤럴드경제 출신으로 구성) 회



원들은 푸짐한 닭백숙 점심에 이어 2차 모임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날 모임에서 회원들은 앞으로 있을 동호인 모임의 활동과 하반기 산행계획에 관해 논의했다.

대조영(大祚榮)은 우리 민족사를 빛낸 영웅의 한 사람이다. 대조영은 고구려를 이은 ‘해동성국(海東盛國)’ 발해의 시조다.

필자는 광복 50주년이던 지난 1995년 7월 백두산을 등정한 뒤 만주의 고구려·발해 유적을 답사한 적이 있었다. 그때 안내판마다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 ‘발해는 당나라 때 속말말갈인이 중국 동북과 소련 연해주에 세웠던 지방정권’이란 터무니없는 소리가 들어있기에 통분했었다. 발해는 고구려 유민이 건국한 뒤 약 230년 동안 오늘의 중국 만주와 러시아 연해주 일대를 지배했으며, 건원칭제(建元稱帝)한 당당한 대제국이였다. 황제를 칭하고 독자적 연호를 사용한 대제국이 어떻게 중국의 일개 지방정권이 될 수 있단 말인가.

668년 고구려가 망하자 옛 고구려 지역은 큰 혼란에 빠졌다. 당은 고구려의 부흥운동에 겁을 먹고 수많은 유민을 요서와 중국 내륙지방으로 강제 집단이주시켰다. 대결결중상(大乞乞仲象)과 대조영 부자도 이때 요서지방 조양에 이주당한 고구려의 유장이였다.

696년, 거란족인 송막도독 이진충과 귀성주자사 손만영이 항쟁을 일으켜 영주를 함락하고 도독 조문해를 잡아 죽였다. 이 반란으로 당나라가 혼란에 빠진 틈을 이용, 대조영은 고구려의 유민 수만 명을 이끌고 말갈족 지도자 걸사비우(乞四比羽)와 더불어 조양을 탈출,

동쪽으로 요하를 건너 고구려 옛 땅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당은 대조영을 진국공(震國公)으로, 걸사비우를 허국공(許國公)으로 봉해 달래려 했으나 이들은 허울뿐인 명예직을 받지 않았다. 당은 회유책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무력행사를 시도하여 거란 출신 대장군 이해고와 중랑장 색구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이들을 추격, 섬멸토록 했다.

당군과 쉴 새 없이 혈전을 벌이면서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들은 계속 요동으로 향했다. 그 동안 이해고와의 싸움에서 걸사비우는 전사하고, 대조영도 행군 중에 병사했다. 최고지도자가 된 대조영은 출중한 용맹과 지략까지 겸비한 당대의 영웅이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맹이 뛰어났으며, 말을 잘 탔고 활을 잘 쏘아 고구려의 장수가 되었다고 한

溫故知新

大祚榮과 발해사



황원갑

·본회 회우
·전 서울경제 문화부장
·소설가
·역사 연구가

다.

그는 끈질기게 추격하는 당군을 유인하여 천문령전투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었다. 대조영은 무려 5천km의 대장정 끝에 698년 오늘의 길림성 돈화시 송화강 건너편의 동모산에 오동성을 쌓고 새 나라 대진국(大震國) 건국을 선포하고 연호를 천통(天統)이라고 세웠으니, 이는 고구려가 멸망한 지 30년 만의 일이었다.

그런데 최근 필자가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대조영이 첫 도읍지로 삼은 동모산의 오동성 옛터인 산성자산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인근 주민들이 산성의 성돌을 건물 기초석이 나 담장용, 심지어는 돼지우리를 짓기 위해 계속해서 빼내가는 바람에 성벽의 유적이 하나도 남지 않은 폐허로 변했다는 것이다.

당시 신라는 당의 힘을 빌려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뒤 대동강 이남을 지배권으로 하고 있었기에 발해의 건국이 달갑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당나라도 형식적이나마 고왕(高王·대조영)에게 사신을 보내 발해군왕(渤海郡王), 태자 대무예(大武藝)에겐 계루군왕(桂婁郡王)이란 칭호를 주었지만, 신라는 고왕에게 신라의 5품관에 불과한 대아찬 벼슬을 주는 모욕적 망발을 자행했던 것이다.

발해가 건원칭제한 당당한 제국이었음을 증명해주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 1980년 길림성 화룡현 용두산에서 발굴된 제3대 제왕 문황제의 넷째 딸 정효공주(貞孝公主) 묘비명에 부황을 가리켜 황제를 부르는 칭호인 ‘황상(皇上)’이라고 표현한 대목이 나온다. 또 ‘속일본기’에 따르면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문황제가 자신을 가리켜 ‘천손(天孫)’이라 했고,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유속(遺俗)을 지킨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어찌하여 감히 고구려와 부여를 이은 이 같은 대제국을 가리켜 ‘말갈족의 나라’라느니, ‘소수민족의 지방정권’이라느니 하는 망발을 되풀이하고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터무니없는 역사 왜곡과 탈취 만행을 자행하고 있는가.

중국의 오만한 중화주의, 제국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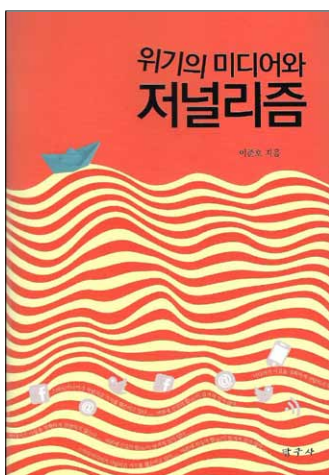
회우들이 펴낸 신간

이준호 회우 ‘위기의 미디어와 저널리즘’

이준호 회우가 자신의 방송기자과 홍보공직 30여년의 경험과 생각을 묶어 <위기의 미디어와 저널리즘>책자를 펴냈다. 이 책은 우리가 접하는 ‘미디어보도’가 과연 사실을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전달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과, 미디어를 통해 발표되는 ‘여론’이 진정한 대중들의 속마음을 반영한 것인가 하는 물음에서 출발한다. 저자는 이 두 가지의 문에 대한 답이 ‘아니다’라는 전제 아래 사실보도와 여론조사를 왜곡시키는 요인들을 짚어 나간다.

저자는 공론장형성과 사회통합의 매개체역할을 담당해 온 저널리즘가치가 인터넷과 디지털에 기반한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훼손되거나 소홀하게 인식되면서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역기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다.

아울러 일간신문 구독률이 20.6% (2013, 언론진흥재단조사)로 급락하면서, 검색엔진 포털사이트가 뉴스의 가치와 선택, 배열을 결정하고 검증 안된 SNS정보가 여론형성을 선점하는 ‘사이버세계’를 비판 없이 수용하는 젊은이들에게 민주주의가치체계를 만들고 지



탱해온 저널리즘의 속성과 기능, 가치를 일깨우려 한다.

저자는 또, 자신이 15년 몸 담았던 홍보공직의 경험을 토대로 정부의 국정홍보 난맥상을 지적한다. 한시적인 정권홍보와 긴 호흡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정책 추진동력을 얻어야 할 국정홍보를 구분하지 못하는 ‘인식의 잘못’에서부터 정부전체를 한 묶음으로 보는 ‘홍보시스템과 컨트롤타워의 부재’, 구조적으로 ‘전문가확보가 불가능한 공무원조직체계’ 등을 지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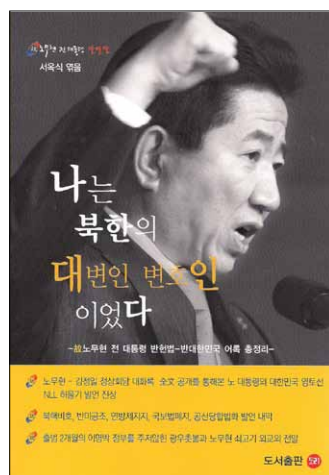
저자가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인류가 창조한 미디어가 오히려 인류의 일상을 가두고 지배하는 스마트미디어시대가 되면서, 저널리즘가치에 충실한 미디어를 아쉬워하는 시점에서 출간된 이 책은 저널리즘에 기반한 미디어 개론서이자 스마트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이 되새겨 볼 교양서적이다.

저자는 KBS정치부차장과 해외공보관, LA문화원장, 공보처 홍보기획관, tbs교통방송 대표를 역임하고 2009년부터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겸임교수로 출강하고 있다. [주]

서옥식 회우 ‘나는 북한의 대변인...’

故 노무현 전대통령의 어록을 정리한 <나는 북한의 대변인 변호인이었다>가 도서출판 도리에서 출간됐다. 연합뉴스 편집국장 출신의 서옥식(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회우가 자신의 2010년 저서 <노무현 전 대통령 말말말>을 보완하고 수정한 이 책은 특히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총 246명의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나타난 발언들이 생생하게 담겨있다.

특히 ‘통일위해 대한민국 주권 일부도 포기해야’, ‘연방제 통일방안 반대할 이유없다’, ‘대한민국은 미국을 등에 업은 분열주의 세력이 건국’, ‘용산 미군 기지는 침략의 상징’, ‘NLL(서해북방한계선)은 우리 영토선 아니다’, ‘NLL 아래 대한민국 영해 안에 남북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 설치 찬성한다’, ‘6·25는 (불법남침 아닌) 내전’, ‘북한 핵이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라는 북한 측 주장은 일리있다’, ‘북한 미사일 발사는 어느 누구를 겨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보차원의 위기 아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북핵위협론을 중요 정보인 것처럼 퍼뜨리지 말라’, ‘핵문제 해결방안으로 유엔을 통한 대



북제재 반대한다’ (유엔은 노대통령의 이런 의지를 묵살하고 북한의 미사일발사, 1차 핵실험, 2차 핵실험, 3차 핵실험 직후 각각 대북제재를 결의, 시행하고 있다)

‘국보법은 박물관으로 보내야/ 자주국방이란 말 쓰면서 주적 용어 없애버렸다’, ‘나는 외국정상들과 회담 때 북한 측 대변인-변호인

노릇했다’, ‘나는 지난 5년간 6자회담에서 북한 입장을 갖고 미국과 싸웠다’, ‘김정일 위원장이 오래 사셔야 인민이 편안해 진다’, ‘북한은 1987년(KAL기 공중폭파사건)이후 테러를 자행한 적 없다’, 등등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록들을 모은 책이다.

김정일은 군사경계선이란 북한의 도발로 촉발된 제1연평해전(1999년 6월 15일)직후인 1999년 9월 2일 북한이 NLL 남쪽에 일방적으로 그른 해상경계선이라고 주장한다. 김정일의 제안은 NLL과 그 아래 우리 영해안에 북한이 멋대로 그른 해상군사경계선을 남북한 모두 각각 포기하지는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것인데도 노대통령은 여기에 맞장구를 치며 편승한 내용들이 자세히 소개돼 있어 주목을 끈다. [주]

마추픽추 유적에 압도 당하다

南美여행기

송선무 (본회 회우·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2월 6일 4시께 LA 공항을 떠나 먼저 도착한 곳은 브라질 상 파울루 룰루스 국제공항. 입국 수속을 마치고 출구 쪽으로 나오니 금방 숨이 막힐 정도로 뜨거운 기운이 내 몸을 감쌌다. 숙소인 봉이찌로 근처 류자 플라자 호텔은 한국 투숙객들이 많이 체류하고 있어 가이드 없는 관광스케줄에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사실 이곳은 포르투갈어가 상용어로 짧은 영어도 잘 통하지 않는 나라다. 그런 상황에서 사업차 이곳에 투숙중인 한국인을 많이 만날 수 있어 언어 불통에서 오는 불편함을 날려 보 낼 수 있어 다행이었다. 이번 남미 여행에서 느낀 소감으로는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를 단 몇 시간이라도 공부하고 떠나라고 당부하고 싶은 심정이다.

도착 이틀 날부터 본격적으로 도시적인 매력이 넘치는 중심가를 걸어 도심 구석구석을 기웃 거렸다. 연일 섭씨 37~38도를 오르내리는 (70년대 최고의 더위 기록) 찜통 더위가 계속 된 탓인지 한낮 상 파울루 중심가는 차량 행렬만 있을 뿐 걸어 다니는 사람은 드물었다. 그래서인지 알찌노 아란 찌스빌딩, 마르씨넬리 빌딩 등 중세 시대의 건축물과 현대식 고층 건물들이 즐비한 이른바 금융가 거리였지만 별로 활기를 띠지 않는 듯 했다. 특히 주말이면 상점문도 대부분 닫았고 오고 가는 사람도 적어 북적거리는 주말 도심 풍경이 없었다. 더구나 사무실 간판을 철저히 작게 만들도록 규제하고 있어 화려하고도 요란스러운 도시라는 인상을 주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는 필자의 잘못된 선입견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외국여행을 하다보면 제일 신경 쓰이는 것이 음식 문제다. 그동안 외국 여행을 하면서 현지 음식 때문에 별 고생이 없었는데 이번 남미 여행에서는 무척 애를 먹었다. 음식이 무조건 짜서다. 빵도 짜고 계란 말이. 소시지 볶음도 짜서 도저히 한 입 물면 더 이상 입에 대고 싶지 않았다. 심지어 유명한 음식점 켈레시아에서 먹었던 브라질 유명 요리도 내입에는 맞지 않았다. 특히 꼬챙이에 꿰어 구운 각종 소고기를 손님이 원하는 대로 썰어 주는데도 짜서 좀처럼 먹을 수가 없었다.

포스트 이과수 폭포의 절경

여기서 약 한 시간을 비행하면 포스트 이과수 공항. 여유 있는 관광객의 경우 헬기를 타고 이과수 폭포 이따이뿌 댐, 3개국 국경 등 중요 관광지를 35분만에 돌아 볼 수 있다. 경비가 1백 달러로 비싸지만 관광객들은 줄을 서고 있다. 새 동물원을 본후 본격적으로 관광하게 될 이과수 국립공원이 무척 기대 되었다.

포스트 이과수 폭포는 1억 2천만년 전부터 존재했는데 서양에 알려 진 것은 지난 16세기 중반. 원주민들에 의해 오랜 세월 성지로 추앙되었던 이곳은 거대한 단층운동에 의해 경사가 바뀌면서 폭포가 형성됐고 1986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 이과수 폭포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국경에 걸쳐 볼 수 있는데 브라질쪽 17만



해발 2,430미터 마추픽추 봉우리 정상에 선 필자.



이과수 폭포 앞에서.

헥타르, 아르헨티나 쪽 22만 헥타르에 이르는 국립 공원에서는 열대 우림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동식물을 만나 볼 수 있다.

이과수 폭포 주변은 높은 습도로 금방 엄청난 소낙비가 쏟아진 후 해별이 잠시 나와 마른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래서 폭포 산책로를 따라 걷는 길이 서늘하기 까지 하다. 멀리서 들려오는 폭포 소리와 함께 전개되는 장관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진기 셔터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 폭포 아래 출렁이는 강물에는 래프팅 하는 배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 모습을 따라 산책로를 걷다 보면 폭포위 철제 다리위에 이르게 된다. 수많은 인파로 북적인다. 관광객들은 일제히 그 경이로운 모습에 환호성을 지른다.

세계 7대불가사의의 마추픽추

드디어 이번 남미 여행의 하이라이트로 생각하고 있는 페루를 찾아 잉카 문화에 푹 빠질 수 있는 날이 왔다.

2월 15일 12시45분 쯤. 부에노스 아이레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칠레 산티아고를 거쳐, 산티 잉카 문명의 본거지로 잘 알려진 페루에 도착했다. 페

루의 역사는 스페인이 침략한 시기를 기점으로 그전 시기를 프레 잉카 시대라 하고 그 이후를 잉카 시대로 구분한다. 페루 태평양 연안과 안데스 고원에 10개 이상의 고대 문명들이 흥망성쇠를 거듭 해왔다.

기원 전 1500년 경 부터 페루 북서부에 자리 잡는 차반 문명을 비롯, 빠라카스 반도를 중심으로 한 빠라카스 문명, 사막에 지상 그림을 남긴 나쓰카 문화 등 스페인 시대 이전 고대 문화가 넘쳐 나는 지역, 처음 밟는 마추픽추 관광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설렌다. 쿠스코지역에서 가장 신비감을 주며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유적은 역시 쿠스코 북서쪽의 마추픽추 정상에 자리 잡은 계단식 성곽 도시 흔적이다. 해발 2430미터 정상에 자리 잡은 이 유적은 1911년 하이럼 방엄 교수에 의해 발견되기 전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공중도시였다.

이 유적을 구경하려면 마추픽추 아래에 있는 이과수갈리엔 데스까지 가야 된다. 거기서 다시 마추픽추로 올라가는 버스를 타거나 도보를 이용한다. 기차에서 내려 마추픽추를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 이미 관광을 다녀와 기

차를 타고 돌아가려는 여행객들, 또 이들을 상대로 특산물을 팔려는 잉카시대 고산지대에 살았던 원주민들의 후예들로 역전 광장은 완전 도떼기 시장 같았다.

마추픽추 입구까지 가는 버스를 타고 드디어 황토 물이 흐르는 다리 위를 건너 그야말로 구절양장의 도로를 따라 마추픽추 입구까지 갔다. 순간 뒷길을 보니 완전 낭떠러지기에 선 느낌이다.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화유산으로 손꼽히는 잉카 유적, 쿠스코에서 북서쪽으로 110킬로미터, 해발 2430미터에 위치한 ‘높은 봉우리’라는 뜻의 마추픽추가 경이로움을 과시한다. 정교한 석재 기술을 이용해 1459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잉카의 계획도시다. 이 마추픽추는 1983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세계 7대 불가사의중의 하나다.

신비와 경이의 잉카 문화

많은 사람이 유적지 입구에서 왼쪽으로 향하는 좁은 산길을 따라 정상으로 향한다. 모두들 고산병후유증으로 조심조심 천천히 오르라는 말을 기억하며 높은 산을 등산하는 심정으로 발길을 땀다. 대부분 가이드를 따라 그룹으로 오르는 여행객들이었고 혼자서, 그것도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올라가는 경우는 드물었다. 오를수록 숨이 가빴다. 그럴 때마다 직사각형 아니면 정사각형으로 다듬은 돌로 정교히 쌓아 만든 여러 건물 터를 접할 때마다 감탄사가 쏟아지면서 호흡 곤란 같은 어려움은 쉽게 잊을 수 있었다. 나아가 이 해발 2430미터되는 산꼭대기에 어떻게 돌을 싣고와 이런 엄청난 건물을 지었을까 생각하니 5백여년전 잉카 시대 사람들의 석재건축 기술에 경탄을 금할 수 없었다. 마침내 ‘높은 봉우리’란 뜻의 우이 아아픽추를 배경으로 한 유적 전체가 한눈에 들어온다. 바로 그곳에 사진찍기에 가장 좋은 망지기의 집이 있었다. 서쪽의 급격한 경사에 꾸며 놓은 농경 지역도 보였다.

이곳은 3개의 창문으로 이루어진 주로 신전들이 모여 있는 신성한 지역으로 정교한 건축양식과 건물 형태에서 태양이나 하늘과 관련된 의식이 거행됐던 곳으로 추정된다. 발길을 옮겨 천문 관측소 안띠와파나, 콘도르의 신전, 태양 신전, 이밖에 빠차꾸펙왕의 시신이 모셔졌다고 전해하는 능묘를 꼼꼼히 둘러 봤다. 잉카인들이 왜 이곳을 만들고 어떻게 버려지게 되었는지 미스터리다.

다만 이 빠차꾸펙왕의 지시로 만들어져 하늘을 관찰하고 농경과 관련된 시기를 파악하기 위해 머물렀다는 설도 있다. 아무튼 높은 지역에서 생활해야 했던 당시 사람들의 필수품인 물을 공급하기위해 우물을 유적 도시를 관통해 만든 것에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계단처럼 만든 발 옆에 식량 저장고인 골짜가 있는데 평소 식량을 이곳에 저장했다가 필요 할 때면 배분한 것으로 보인다. 16세기와 21세기를 넘나드는 갖가지 상상을 떠올리며 신비스러움과 경이로움에 둘러싸인 마추픽추 관광을 마쳤다. [2]

수도권 전철로 떠나는 피서여행

올 여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마땅한 곳은 없을까?

수도권엔 지하철 9개 노선에 인천공항으로 가는 공항철도, 청평과 가평 거쳐 춘천까지 가는 경춘선, 팔당과 양평 거쳐 용문까지 가는 중앙선 전철, 파주와 문산으로 가는 경의선 등 65세 이상은 ‘시니어카드’로 무임으로 갈 수 있다. 당일치기로 간다면 2만원만 주머니에 넣고 가면 점심에다 막걸리나 소주 한잔도 곁들여 즐길 수 있다. 그럼 지하철과 전철을 타고 떠나보자.

지하철·전철1호선코스

먼저 1호선. 전철을 타고 인천역 차이나타운에 도착하면 마치 중국에 온듯한 기분도 잠시, 시대를 뒤로 돌려놓은 것 같은 건축물들이 발길을 붙잡는다.

인천역 광장에서 ‘차이나타운’으로 가서 중식을 한 후, 연안부두에서 팔미도행 유람선을 타고 21.27km 국내 최장 길이의 ‘인천대교’와 106년 만에 처음 공개된 신비의 섬 ‘팔미도’ 등을 둘러보는 관광코스가 있다. 또 여행객들은 인천 종합어시장에서 싱싱한 활어회와 각종 해산물도 구입할 수 있다. (코레일문의 02-2634-2401)

온양온천역으로 가보자.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2시간이면 갈 수 있다. 120여 개가 넘는 온천탕도 있고 숙박시설도 있다. 온천욕하고 전철로 천안으로 간 다음 버스로 병천에 들러 그 유명한 병천 순대와 소주 한잔 들이켜면 하루가 즐거울 것이다. 1호선 오산역에 내리면 걸어서 10분이면 ‘물향기 수목원’으로 갈 수도 있다.

약 10만 평 부지에 1,600여 종 42만 5,000여 본의 식물을 전시하고 있다. ‘물과 나무와 인간의 만남’을 주제로 하여 모두 19개 주제원 이외에 산림전시관, 숲속쉼터, 잔디광장, 전망대 등의 부대시설로 이루어졌다. 또한 곤충류, 조류 등을 관찰할 수 있는 전시공간도 있다. 입장은 무료.

계곡과 바다가 지겨우면-

지하철 8호선 산성역에 내리면 이번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경기도 도립공원인 남한산성에 갈 수 있다. 산성역에서 남한산성행 버스 9-1을 탄다. 경관이 수려하고 푸른 나무들이 울창해 여름 피서지로, 당일 여행지로 가능한 곳이다. 이곳엔 문화유적지뿐 아니라 최근 복원을 끝낸 행궁도 볼 만하고 천주교 순교성지, 불교전통사찰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먹을거리가 많다.

경춘선을 타고 간다

이제 경춘선을 타고 춘천으로 간다. 용산역이나 청량리역에서 떠나는 iTX로 가평은 물론 청평으로 간다. 요금은 내야한다. 65세 이상은 할인혜택. 그러나 무임전철도 있다. 지하철 7호선 상봉역에서 춘천까지는 2시간 10분정도 걸리지만 먹을거리인 막국수, 닭갈비가 있다. 여럿이서 갈 때 닭갈비전문 음식점에 예약을 하고 가면 업소가 무료로 제공하는 관광버스로 의암호와 소양강

치녀상 등 춘천의 관광지를 두 시간 정도 돌며 구경할 수 있다.

4호선 타고 간다

4호선 타고 남쪽 끝까지 가면 오이도에 도착한다. 한 시간 반이면 갈 수 있다. 바닷바람이 시원하다. 오이도에서 내리면 바로 수원으로 가는 전철을 타고 소래 포구로 가보



이보길

·본보 편집위원
·전 KBS 해설위원

있는 공원으로 가서 돛자리 하나 펼치면 훌륭한 술자리가 된다.

싱싱한 자연산 회와 꽃게, 젓갈 등 각종 수산물을 싸게 먹을 수 있다. 협궤기관차가 전시돼있고 협궤시절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소박물관도 있다.

참 ! 오이도는 맛조개잡이 갯벌체험도 할 수 있고 조개구이, 산

데 이 열차는 주말과 공휴일에만 운행된다. 용유역에서 내려 한 15분정도 걸으면 무의도로 가는 배가 있는 잠진선 착장에 도착한다.

여기서 배를 타면 5분 만에 무의도에 도착. 무의도에서 400미터 길이의 다리를 건너 나무데크로 만든 길로 들어서면 섬 가장자리로 이어지는 산책로 무의바다누리길 2.48km를 산책 할 수 있다. 또 영화 ‘실미도’와 ‘천국의 계단’ 촬영장 등을 구경할 수 있다.

지하철3호선 코스

경복궁역에서 내려 부암동으로 간다. 가기 전에 통인시장에 들러 존 케리 미국무장관이 여기와서 먹었다는 기름 떡볶이 한 점식먹고 버스를 타고 부암주민센터 앞에서 내린다. 여기저기에 아주 예쁜 가게들과 거리가 걷기에 안성맞춤이다. 여기에 계곡이 있다. 실개천을 따라서 걷다가 부암동 온천 넘어가는 길로 들어선다. 걷는 코스도 두 시간 정도로 여유있게 걸어도 되고, 중간 중간에 카페나 꽃들이 많아서 산책하기에 좋다. 무난하게 걸을 수 있고 힘들지 않다. 백사계곡이 있어서 발도 담글 수 있다.

중앙선 전철을 타면

팔당역에서 내리면 이색적인 게 폐철도 선로를 이용해 강변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곳이 있다. 여기서 강변을 넘어가면 바로 능내마을인데 유적지로 유명하다. 여기는 언덕이 거의 없고 평지다.

거기다가 한강을 바로 곁에 두고 철길을 따라 걸을 수 있다. 박물관도 있고 또 그쪽에서 식사를 한 후 팔당역으로 돌아오면 된다. 그리고 용문역에 내리면 역 근처에 유명한 지평막걸리 집이 있는데 여기서 잠시 목을 축이고 용문사로 가면 1,100살이 된 은행나무가 있다. 용문사 매표소에서 용문사까지 15분정도 거닐수 있는 오솔길이 있다. 농업박물관과 공원처럼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전통적인 조형물 등 볼거리가 풍성. 또 용문역에서 내려 택시나 버스를 이용해 연수리로 가면 ‘컨트리슬라장’에서 체험삼마도 할 수 있다.

다문화거리 체험도 재미

안산시 원곡본동 다문화음식거리와 서울 해화동 필리핀 벵룩시장도 볼만하다.

지하철 4호선 안산역으로 가 ‘안산다문화음식거리’로 가자. 베트남·타이·인도네시아 등 여러 문화권 출신의 이주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동남아 음식점이 준비하다. 음식 맛도 서울에서 맛보는 동남아 식당과 다르다. 베트남 쌀국수도 현지의 맛이 살아 있다. 여러 문화권의 생활용품을 파는 가게도 흥미롭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서울 해화동성당 주변에서 열리는 ‘필리핀 벵룩시장’도 찾아간다. 매주 한 번 열리는 필리핀어 미사 덕에 생긴 벵룩시장이다. 200m 거리에 좌판이 깔리고 즉석 음식 테이블도 등장한다. [출처]



용유도 임시역.



용유도 선녀기암.



실미도 해수욕장.

자. 이 철도는 과거 협궤이던 수인선을 개조해 일반 전철이 다닐 수 있게 했다. 이제 소래포구는 옛날처럼 조용한 포구 모습은 없지만 시원한 바닷바람을 쐬면서 회를 먹을 수 있는 멋진 곳이다.

횃집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생선회를 떠서 생선가게와 인접한 방파제에 앉아서 먹을 수도 있고 고가전철 밑에

낙지, 고동 등을 먹을 수 있는 맛집이 수도룩하다. 오이도 낙조는 일품이다. 붉은 낙조에 세상의 모든 고민을 불태워 버리는 것도 좋을 듯.

공항철도를 타볼까

인천국제공항에서 가는 해외여행이 아니다. 인천공항 지나서 용유역으로 가는 거다. 거기서 무의도로 가는 것인



전원생활, 발효식품, 발효수익, 자연혜택, 일자리... **1석 5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수입도 가능한 **고수익형 전원주택** 서울까지 1시간대 교통, 수월한 환매, 편리한 회원편익 제공

양평 광탄 유원지 옆 남향 언덕배기에 92세대의 그림 같은 전원주택이 들어선다. 언덕 위의 나의 집, 약 150~200평 가량의 대지에 약 25평~30평대의 주택을 짓는데 3억원대~4억원 가량 들게 된다. 3억원대 집이라 가정할 때 1억 7천만원은 내 돈이 들어가지만 나머지는 은행에서 융자를 해준다. 이율은 연 4%대 가량이지만 은행과 교섭할 수 있거나 더 좋은 방안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만큼 이자 부담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원리금 상환은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나오는 구조다. 그게 바로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유럽의 kleine garten 기능에 레지던스 발효마을을 합친 사업이다. 서울역 종합청사와 서일대학교, 바비엔 1,2,3 등을 설계한 ㈜수건축사무소 이종택 소장의 설계로 건설되는 25평대 집에서 부부가 함께 살면서 민박형식의 방 2개를 빌려주면 1박에 7~10만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방 대여와 수급은 이 사업에 오랜 경험이 있는 레지던스 바비엔(회장 박경자)에서 진행한다.

숙박인에 대한 관리는 바비엔에서 한다. 출입문은 내가 생활하는 공간과는 별도로 나의 프라이버시와는 무관하다. 집 자체는 물론 정원의 조경과 주위환경 가꾸기도 바비엔에서 해준다. 말하자면 호텔에서 음식을 해먹으며 생활한다고 보면 된다. 마을길에는 매화 및 유실수를 심어 봄에는 꽃을 보고 여름과 가을엔 매실과 같은 열매를 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원주택

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집수리 등 온갖 잡일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 아파트처럼 마을 전체 관리시스템을 바비엔에서 사후관리까지 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발효식품 이야기이다. 발효전문가가 지도하는 발효식품을 각 가정에서 만들게 되면 최저 월 300만원~500만원의 수익이 생기는 것은 덤이다. 각 가정마다 5~10평의 작업실을 만들어주고 그 작업실에서 발효식품(고추장, 된장, 간장, 식초, 약초 등)을 만들게 되며 판매는 역시 바비엔에서 진행한다. 요즘 제대로 된 발효식품은 없어서 못 판다. 그러니 연간 수입이 레지던스와 발효식품을 합쳐 줄잡아 5천만원~6천만원은 되는데 우리 나이에 여기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나 싶다. 발효식품 생산은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안 해도 관계 없다. 바비엔에서는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다. 전국 3백여 군데에 이런 시설을 만든다는 것이다. 발효전문가의 발효식품 강의를 듣고 실습까지 터득한 우리는 1세대 선생님이 된다.

전국 3백여 곳의 단지를 돌며 우리가 발효식품 강의를 하게 되며 내 돈 한푼 안들이고 그 지방의 명소를 구경하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특산물을 구입하는 등 말 그대로 이기는 게임이 될 것이다. 발효식품을 할 경우 적당히 일을 하게 되니 건강을 챙기게 되고 카페, 의원, 회의실, 미용실, 세탁소 등의 각종 문화시설과 밝은 태양, 맑은 공기, 시원한 바람 등의 자연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수익사업, 건강한 생활, 문화생활 등을

하나로 누리는 일석오조인 셈이다.

거기다 지공파들은 인근 용문역에서(서틀버스 이용 시 10분 이내) 서울까지 한 시간대에 차비 한 푼 안들이고 나들이 할 수 있다.(용문 흥천 간 강원내륙순환 철도가 완공되면 1시간 이내) 살다가 이젠 살기 싫든가 계속 생활할 수 없는 여건이면 어떡하나?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땐 원래 금액으로 바비엔에서 되사준다고 한다. 물론 집값이 많이 오르면 개인적으로 팔아도 된다. 집값이 떨어져도 원가에 되사준다고 하니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닌가? 더욱이 새 경제팀이 들어서서 이제부터는 부동산 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여유 있는 분은 3~4채 사서 통째로 임대하면 그게 은행이자나 ELS투자에 비하겠는가! 모델하우스가 준공되는 7월 중순 이 일에 찬동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현지답사 기회를 갖기로 했다. 이날은 바비엔 회장님께서 현장설명과 사업개요를 브리핑하게 된다. 자동차 관계로 너무 많은 사람이 갈 수 없으므로 뜻있는 분들 부부가 40명 정도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대한연론인 사무처에서 접수대행) 현지답사는 선착순 40명이며 신청자에 한해 7월 23일 수요일 10시 프레스센터 앞에서 떠날 예정이다. 주말에는 오후 2시~3시까지 줄을 서야 한다는 단지 부근의 음식점에서 바비엔 회장이 한턱 내는 오찬도 함께하게 된다.



바비엔 양평 발효밸리 서비스 레지던스 | 상담문의 **02)6399-6443**

이웅희 원로회우 별세

이웅희 원로회우가 오랜 투병 끝에 6월 3일 별세했다. 향년 83세.

1931년 경기도 용인에서 출생한 고인은 중앙고와 서울대 공대를 나와 미국 노스웨스턴대 신문학과를 수학한 뒤 1953년 자유신문 정치부기자로 언론계에 입문, 27년간 신문기자로 일했다. 중앙일보 평화신문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 등을 거쳐 1959년 동아일보에 입사해서는 정치부장, 외신부장, 기획부장, 논설위원, 주미 특파원, 편집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그는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 겸 청와대 대변인으로 활동했고 문화방송(MBC) 사장, 한국프레스센터 이사장을 거쳐 문화공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13, 14, 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당무위원을 지냈다. 이 밖에도 고인은 한국언론회관 이사장, 성균관 이사장, 성곡 언론문화재단 이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를 지냈고, 의원 시절에는 한일의원연맹 부회장을 역임했다.

대한언론인회는 6월 5일 오후 4시 고인의 빈소에서 언론인장으로 추도식을 거행하고 명복을 빌었다. 이날 추도식에는 흥원기 명예회장, 김은구 회장을 비롯 정기정 감사, 조용중 원로회우(조사 낭독), 신동호, 박재권, 이종식, 노철용, 박기병, 여영무, 신대근, 문명호 회우가 참석했다. [국회]

故이웅희 장관을 보내며

조용중(본회 원로회우·전 연합통신사장)

그 길고도 외로운 아픔과 괴로움을 아무 말도 안한 채 견디시더니 끝내 소천의 길로 들어선 古蜜 이웅희 장관을 북망의 땅으로 보내면서 친구 조용중이 대한언론인회가 마련한 자리에서 고별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 장관은 나이 든 뒤에 관직에 올라 문공부장관이라는 현직에 올랐고 뒤에



고 이웅희회우 빈소에서 조용중회우가 조사를 읽고있다.

국회의원으로도 큰 몫을 치르셨던 것을 여기 모인 친구들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조촐한 자리를 만든 대한언론인회도 이 장관이 젊음의 열정으로 몸바쳤던 일터에서 만났던 옛 친구들의 모임입니다.

이 장관을 보내는 이 자리를 빌어 저는 이 장관과 저만이 겪었던 역사의 현장 취재에 숨은 뒷 이야기 하나를 회고하고자 합니다. 이 장관은 생전에 이 이야기를 스스로 밝힌 적이 없었기에 오늘 처음으로 듣는 이도 있을 겁니다. 이 장관이 병마에 쓰러지기 전까지 우리는 달마다 24일이면 조촐한 점심모임을 가졌었습니다. 24일이라는 날짜는 1958년 12월 24일, 태평로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진 이승만 3선 허용 헌법개정을 위해 자유당 정권이 무술경위를 풀어서 야당 국회의원을 완력으로 몰아냈던 파동의 날이었습니다.

그 파동을 수습하는 여야당 대표의 협상이 열리기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전의 어느 날 이 장관과 저는 기발한 모험을 해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협상 장소인 국회의장실 큼직한 테이블 밑에 돌이 미리 숨어들어가서 회담을 엿듣자는, 아무도 생각 못한 엉뚱한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에 따라 들어간 의장 테이블은 여러해 찌 청소를 안한 탓으로 숨쉬기가 힘들만큼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함께 테이블 밑에 쭈그리고 앉은 우리 둘은 기침이 나오는 것을 참으면서 첫날의 취재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우리가 쓴 회담기사를 보고 국회의원들은 녹음

기를 튼 것 같다고 신기해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앉을 자리가 불편하니 다음날부터는 가위바위보 당변을 정하자고 해서 이 장관이 혼자 들어갔는데 회의 중간에 그만 국회의원에게 들켜고 말았습니다. 그 뒤 회의장소도 다른 데로 옮겼고 협상은 원점을 맴돌았으나 기자들 사회에서는 우리의 모험 취재를 본받자는 말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장관은 그때의 파격적인 취재방식을 굳이 자랑삼아 떠들지도 않았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필요이상으로 자신을 내세워 자랑삼아 유세를 떨려고 하지 않았던 이 장관의 무던한 성품때문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비슷한 이장관과 저는 서울로 환도한 바로 뒤에 자유신보라는 신문사에 함께 들어간 뒤 앞서거니 뒤서거니 여러 곳을 뛰어 다녔습니다. 가정을 꾸민 것도 비슷했고 그래서 이 장관의 자녀와 저의 애들도 자주 어울려 지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장성한 이 장관의 자녀들을 스스럼없이 경칭 빼고 불러도 좋을 만큼 허물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허물없는 자리라지만 안해도 좋을 잡담까지 늘어놓은 것을 용서하십시오.

이웅희 장관, 이승만에서는 참으로 고생 많았습니다. 집처럼 깨끗하게 정돈된 천당에 누워 편안한 시간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국회]

2014년 6월 5일
대한언론인회 고별식에서
친구 조용중 올림

取材여화

고 김흥수 화백과의
만남과 헤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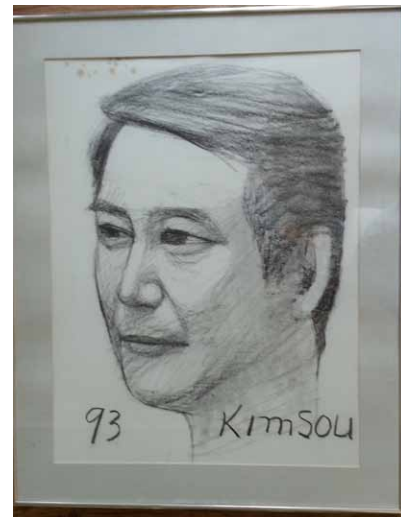
김선기

·본회 회우
·전 KBS모스크바특파원

김흥수 화백이 95세를 일기로 지난 달 9일 별세했다. 20여 년 전 취재로 인한 인연으로 나는 서울대 의대 장례식장에 마련된 상가를 찾았다. 발인을 하루 앞둔 저녁 8시 예상밖으로 조용한 상가에 앉아 노화백과 특파원과 인연을 되새겼다. 21년 전인 지난 1993년 4월말 모스크바에 있는 푸시킨 미술관. 나는 푸시킨 미술관에서 한국인 미술가로는 처음으로 김흥수 화백이 전시회를 연다는 소식을 접하고 러시아인 카메라맨을 대동하고 취재에 임했다. 외국에서 만난 노 화백도 반가와 했으려니와 세계적 문화의 도시에서 한국 화백의 전시가 마음 한편에 뿌듯함을 느꼈다. 한국과 러시아 간의 수교 이후 양국의 문화 교류가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더 그랬다. 푸시킨 미술관은 BC 5세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조각과 그림이 많고 특히 그림은 1500년 후반부터 1900년 초까지 작품을 중심으로 유럽의 나라별 전시관이 있어 모스크바 시민의 예술의 전당이기도 하다.

김 화백의 그림 가운데 눈길을 끈 것은 남녀의 별거 벗은 몸이 대칭적으로 그려진 유화였다. 추상화 같기도 하고 구상화 같기도 했다. 김 화백은 자신의 작품을 음과 양의 하모니라고 잘라 말했다. 취재를 마칠 무렵 김 화백은 오늘 전시 첫날이어서 리셉션을 따로 마련했으니 함께 가자고 권유했다. 미술관을 나서는데 웬 젊은 여인이 내 차에 동승해 안내하겠다고 한다. 알고 보니 그 여인이 바로 김 화백의 부인인 장수현 화백이었다. 리셉션 장에는 러시아 화가들도 여러 명이 와 있었고 한국 취재기자는 나 뿐이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땐가, 김 화백이 내게 연락을 해 왔다. 자기의 숙소에서 차 한잔하자고 했다. 숙소는 넓은 발코니가 있는 양지바른 아파트였다. 김 화백은 차를 마신 후 대뜸 “김특파원, 여기 의자에 앉으시오.” “내가 초상화를 그려 줄 테니 가만히 있으



고 김흥수 화백이 그려준 필자의 초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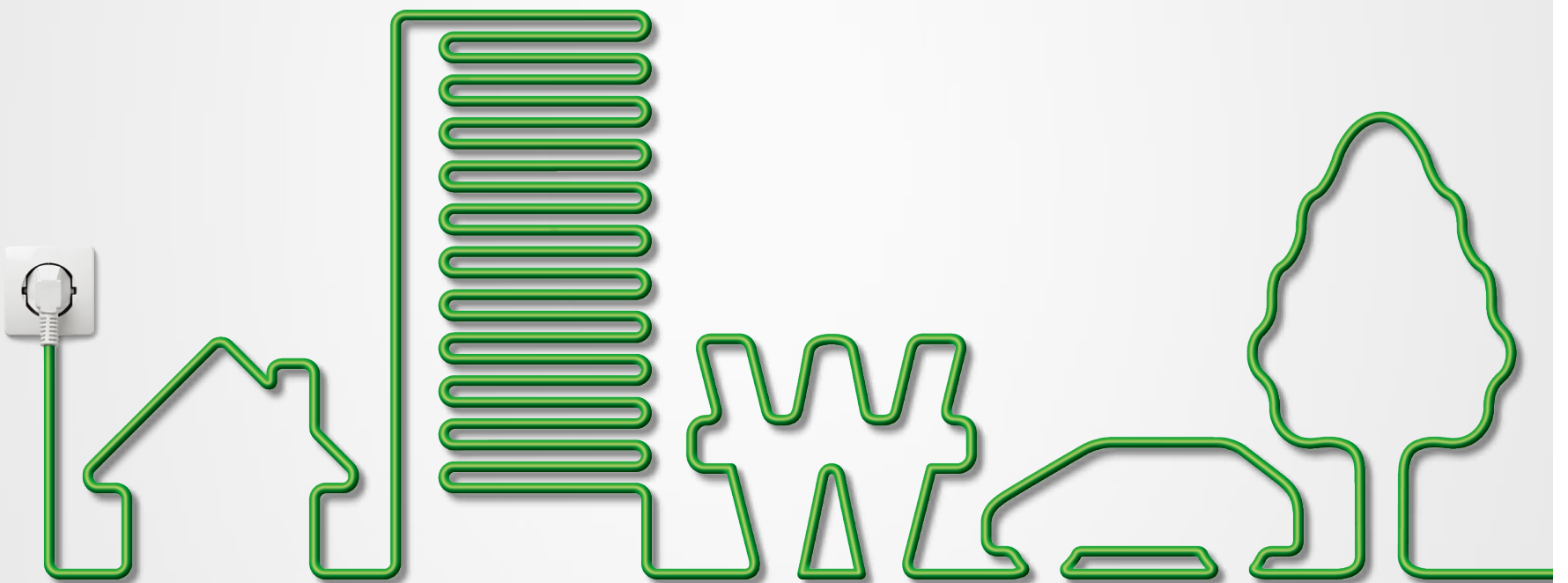
고 김흥수 화백

시오”라며 내 프로필을 그리기 시작했다. “초상화는 실물보다 작게 그리기는 쉽지만 크게 그리는 게 어렵지” 하며 내 얼굴을 크게 그리고 있었다. 30여분인가 다 그린 후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김특파원이 책을 펴내게 되면 이 초상화를 표지에 사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자리를 뜨려는데 김 화백은 내게 한국의 집이 어디냐고 묻는다. 말인 즉 내가 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상화를 굳이 서울로 보내 주겠다는 것이다. 그 후 내가 임기를 마치고 귀국해 보니 내 친척집에 표구까지 잘 돼있는 초상화가 보관돼 있었다.

늦은 밤 장례식장을 떠나며 푸시킨의 시구가 생각이 났다.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 되리니.’ 21년 전 내가 모스크바에서 만난 김 화백은 저 세상으로 떠났지만 그 추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그분은 갔지만 그의 작품들은 오래오래 남게 되겠다. [국회]

전기가 스마트해지면...



집이 스마트해지고, 빌딩이 스마트해지고,
자동차가 스마트해지고, 경제가 스마트해지고,
환경이 스마트해지고, 생활의 모든 것이 스마트해집니다.
전력망의 지능화로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고품질의 에너지를 제공하는 스마트 그리드 -
IT, 건설, 자동차, 전자, 소재, 에너지까지
서로 다른 산업 및 기술간의 융·복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이끄는
한국전력의 신성장동력입니다.

회우동정

가나다순

신아일보 창간 12주 기념식



김명수(신아일보 회장겸 발행인)회우= 지난 6월 9일 자로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신아일보 창간 12주년 기념식에 이어 전 사원 단합대회를 가졌다.

경기 서도대전 초대작가



김윤덕(전평화신문 기자)원로회우= 지난 5월 18일 한국서도협회 경기지회 주최 제11회 경기서도대전 시상식에서 특선상과 초대작가증서를 받았다. 김원로회우는 한국서도협회, 대한민국서도대전, 전국 율곡서예대전, 대한민국 포은서예대전에서도 특선, 입선 등 다수의 입상 경력을 갖고 있다.

‘관피아 어떻게--’ 세미나



박범진(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회우= 6월 24일 오후 2시 서울 신문로 서울교회회관 강당에서 ‘관피아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주)씨세븐 고문취임



심의표(여맥회 회장)회우= 첨단 매장 관리 영상보안 서비스 프로그램인 스마트 키퍼를 서비스하는 (주)씨세븐(C7) 고문에 취임했다.

KBS 1TV출연 6·25 당시회상



박기병(전 강원민방 사장)상담역= 지난 6월 25일 오전 10시 6·25전쟁 당시를 회상하는 KBS1 영상물에서 전쟁당시 싸웠던 현장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신아일보 편집자문위원



박기정(함경북도 지사·사진 위)·이원창(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사진 아래)회우= 신아일보(발행인 김명수) 창간 12주년(6월9일)을 맞아 편집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문학사상 500호 기념 특대호 발행



임홍빈(문학사상 발행인)원로회우= 지난 6월 문학사상 500호기념 특대호를 발행했다. 1972년 10월 창간호를 낸 이래 42여년 동안 쉼 없이 발행해온 문학사상 500호 발행에 대해 많은 문인들과 사회 각계로부터 다양한 축하 메시지를 받았다.

‘법의 지배를 통한 국가개조론’ 기고



여영무(전 동아일보 논설위원)논설위원= 6월 3일자 서울신문 오피니언 페이지(31면)에 ‘법의 지배를 통한 국가개조론’ 주제로 특별기고.

첫 개인전 열어



이명동(전 동아일보 출판국 부국장)원로회우= 7월 5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한미 사진미술관에 첫 개인전 ‘먼 역사 또렷한 기억’을 연다. 이회우는 지난 6월 25일자 동아일보에 ‘6·25중군사진가 이명동씨가 기록한 그날 그사람들’ 인터뷰를 통해 당시 전선에서 찍은 병사의 사진과 사연을 소개했다.



최창봉 명예회우 九旬宴

한국방송인회 마련 80여명 참석

방송인의 최원로로 불리는 최창봉선생(본회 명예회원·MBC사장 역임)이 구순잔치상을 받았다.

지난 6월 19일 낮 한양대학교 동문회관 5층 예식부에서 한국방송인회(회장 장한성)가 마련한 이 잔치에는 방송, 연예, 학계 후배 80여명이 참석해 대선배의 업적을 기리며 백수를 축하했다. 이날 잔치에는 제1부 ‘한국방송과 최창

봉’ 주제의 컨퍼런스와 제2부 축하잔치로 진행됐다. 축하잔치상을 받은 최창봉 선생은 “오랜 세월 함께 일해 온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반갑다”며 고마워했다. 이날 잔치에는 본회 신우식 고문을 비롯, 김성배 김은구 박기병 안평선 이병대 이인원 정창기 한중광 회우 등이 참석했다. [4]

회우들 8순 축하연 잇달아

서울 정동로타리클럽은 지난 6월 17일 서울 캐피탈 호텔에서 있는 제936차 모임에서 본회 신우식 고문의 팔순을 축하하는 케이크 절단식을 가졌다.

한편 수지 지역 퇴직 언론인 모임인 일목회(회장 조용중)는 지난 6월 5일(목) 저녁 월례회에서 올해 팔순을 맞은 노철용(전 경향신문 사장), 강한필(전 불교방송 사장), 최종철(전 SBS 전무)본회 회우의 팔순연을 조촐하게 베풀었다.(사진)

이날 모임은 회원들이 마련한 대형 축하 케이크를 자르고 축하와 팔순을 맞는 소회를 듣는 순서로 진행 됐는데 세 분 모두 80의 나이를 잊은 듯 2차까지 자리를 옮겨가며 두주불사의 왕성한



건강과 기력을 과시하여 주위의 부러움을 샀다. [4]

입회비 · 연회비 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
(괄호 안 숫자는 납입연도, 2014년 5월 28일 부터 6월 27일까지)

이휘(14)

손주환(14)

김한봉(14)

김선기(15,16)

‘건강포럼’ 7, 8월 휴강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7월과 8월은 장마와 함께 무더운 날이 계속 된다고 예보하고 있고 특히 ‘건강포럼’은 장소 사용상 편의를 위해 하루 중 기온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열리고 있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일사병 등 회원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 휴서기간인 7~8월은 강의를 쉬기로 한 것이다.

이보길 건강포럼 간사는 “다음 ‘건강포럼’은 오는 9월에 다시 열릴 예정”이라면서 “많은 회원들의 양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포럼을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는 ‘이윤수·조성완 비뇨기과’에서는 대한언론인회 회원들을 위한 전립선 검사와 치료를 앞으로도 계속 저렴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병원 방문 시에는 대한언론인회회원임을 밝히면 크게 혜택을 받을 수 있

다. 전립선 검사는 일반 병원에서는 30만원 가량 받고 있다.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金銀九
- 인쇄인 李榮一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鄭雲宗
- 주필 文明浩
- 편집위원장 成樂五
- 대외협력국장 黃貴根
- 발행처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 편집제작실 02)2273-4253 드림프랜드

오인환 전 장관 명예회우 추대

김은구 회장은 지난 6월 13일 열린 제142차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오인환 전 공보처장관(사진)을 대한언론인회 명예회원으로 추대했다. 오인환 전 장관은 공보처장관시절 대한언론인회 10억 기금 조성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있다. 오인환 명예회원은 한국일보 외신부차장, 사회부장, 이사대우편집국장, 주필 겸 이사직을 역임하고 관계에 진출했었다. [4]

대한언론인회 자문역등 추대

자문역 김광희 회우
상담역 남시욱, 김영일 회우
사업단장 한기호 회우

대한언론인회는 7월 1일자로 자문역에 김광희 회우를, 상담역에 남시욱, 김영일회우를, 사업단장에 한기호 회우를 각각 추대했다. 이날짜로 임명된 간부진은 다음과 같다.

- ▲ 논설고문 지용우
- ▲ 편집고문 함정훈
- ▲ 사업단 대외 협력 위원장 신대근
- ▲ 출판 홍보위원장 맹태균



김광희 회우



남시욱 회우



김영일 회우



한기호 회우



꿈과 희망,
소재와 에너지로
더 나은 세상을!

거실의TV 속에도



할아버지의 휠체어에도



동생들의
태양열 온수기에도



posco

삼촌의
플렉시블 태블릿 속에도



누구에게나
포스코가
있다

엄마의 마그네슘 프라이팬에도



누나의 첫 차 속에도



큰 형의 자전거 속에도



공부방의
LED 전구에도



당신은 매일 생활 곳곳에서 수 많은 포스코를 만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철강 경쟁력을 바탕으로 첨단 신소재, 그린 에너지 사업을 펼쳐가는 포스코.
더 나은 내일로 당신 곁에 다가가겠습니다.



글로벌 철강

세계 최초 자동차용 초고강도강 등 World First, World Best 제품 양산 / 해양플랜트 등 고품질 에너지 강재 시장 선점 / 2013년 WSD(World Steel Dynamics) 세계 철강기업 경쟁력 1위(4년연속)



첨단 신소재

세계 최초 리튬 추출 기술 개발 (2차전지 핵심원료로 전기 자동차, 휴대폰 등에 쓰임) 및 음극재 생산 / 국내 최초 마그네슘 제련공장 준공 및 고부가가치 소재 (자동차강판 등에 사용되는 망간) 생산 / 제철부산물 활용한 탄소소재사업



그린에너지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석탄화력 등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 / 차세대 에너지-연료전지 원천기술 확보 및 산업화 / 풍력 (탈라해상풍력), 태양광 (미국 네바다주, 신안 태양광 발전단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무료 · 할인 관람

미술관 · 박물관 · 고궁

